

제29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2026. 7. 22.(수), aT센터

www.pcafrp.go.kr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제29차 위원회 －

2026. 7. 22.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29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 계획(안)

1. 개요

- 일시: '26. 7. 22.(수) 15:00 ~ 17:00 * 회의 종료 후 만찬 예정
- 장소: 서울 서초구 소재, aT센터 1층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
- 참석대상 : 위원장, 본위원, 언론사, 사무국 직원 등 70여명
- 안건
 - (보고 2건) ①각 분과위 및 특별위 주요과제 추진현황, ②농수산물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 (심의 1건)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2. 세부 일정(안)

일 정	주 요 내 용	비 고
15:00~15:05 (5')	○ 안내 및 국민의례	총괄기획팀장
15:05~15:15 (10')	○ 참석자 소개 및 성원보고	
15:15~15:20 (5')	○ 위원장 인사말씀 및 개회선언	위원장
15:20~16:40 (80')	○ 안건 보고 및 심의(3건)	사무국장
16:40~17:00 (20')	○ 기타 사항 논의 및 폐회	위원장

※ 상기 일정 및 안건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위원장	김 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부 위원	구윤철	재정경제부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황종우	해양수산부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민간 위원	강혜정	전남대학교 교수
	김맹철	광양시 어민회 회장
	김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김선일	지유팜 대표
	남재작	한국정밀농업연구소 소장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문승국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회장
	박 현	서울대학교 객원교수
	백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양승룡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
	이상귀	해남황칠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정은조	한국산림휴양협회 회장
	최홍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하원오	前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한기형	한살림 아산시 상임위원
	허헌중	(재)지역재단 이사장
	홍충희	제주어류양식수협 감사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간위원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기재

목 차

○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1
----------------------	---

<보고 안건>

○ 각 분과위 및 특별위 주요과제 추진현황	7
-------------------------------	---

○ 농수산물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53
------------------------------	----

<심의 안건>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73
--------------------------	----



제 29 차 위 원 회



전 차 회의 결과 보고



회 의 명	제28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주관기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최일시	2026년 4월 22일(수) 15:00 ~ 17:00
개최방식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3층 세계로룸 / 대면회의
참석현황 (21명)	위원장 : 재적 1명, <u>참석 1명</u> 당연직위원 : 재적 6명, <u>참석 2명</u> 위촉직위원 : 재적 24명, <u>참석 18명</u> *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 해양수산비서관 참석

진행순서

1. 개회
2. 전차 회의 결과 보고
2. 안건 보고
3. 폐회

상정안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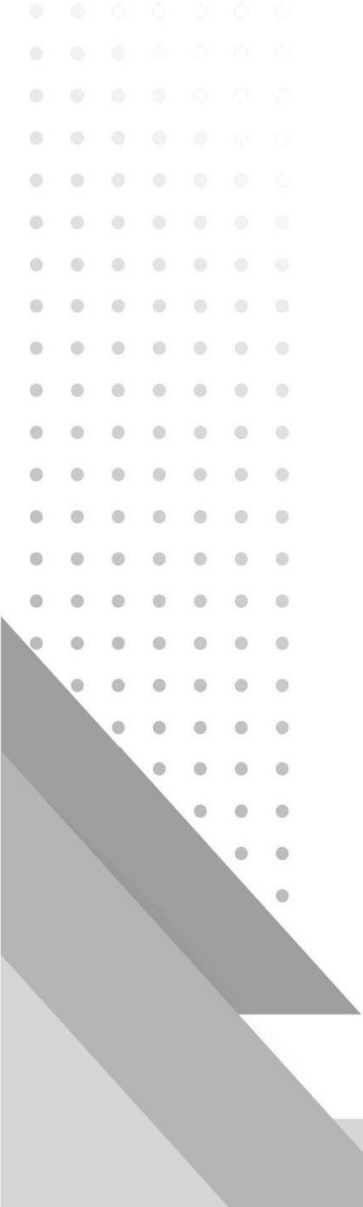
1. (보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2. (보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개정안 수정 제안

< 결정사항 >

1. (보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안) : 원안 접수
2. (보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개정안 수정 제안 : 원안 접수



제 29 차 위 원 회



보고 안건(2건)

각 분과위 및 특별위 주요과제 추진현황

2026. 7.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각 분과위 및 특별위 주요과제 추진현황 세부목차



I. 농업분과위원회	11
II. 수산업분과위원회	21
III. 임업분과위원회	26
IV. 농어촌분과위원회	31
V. 농수산식품분과위원회	36
VI.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46
VII.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49
VIII.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51

I. 농업분과위원회

<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농업인 기준 재정립 방향 합의 및 공론화 추진	○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목적 및 기준 설정, 정책 수요 식별 방안 방향성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추진 -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배경, 목적, 효과, 문제점 등 논의(1차, 3.16.) -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편 방향 논의(2차, 4.7.) - 농업경영체 제도의 실태 및 개선과제 논의(3차, 4.23.) - 농업계 합의 및 사회협약 추진 방향 논의(4차, 5.19.) - 공동 현실 인식 및 농업계 방향성 합의를 위한 단체별 의견 수렴(5차, 6.2.) - 농업인 기준 재정립 설문 기획 회의 2회(6.15., 6.22.) ○ (향후계획)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업인 대상 의견조사 : 7.20.까지 -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위한 토론험담회 등 추진 : '26. 8월~11월
2. 농지제도 개선 방안	○ 11개 의제 선정하여 주요 쟁점 위주로 집중논의 후 과제로 확정 * 농지 세제, 농지 임대차 제도, 농지관리전담 기구, 농지정보 종합 DB구축 등 -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 종합 DB구축 필요 농식품부에 제안 - 농지 전수조사 예상문제점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부처 전달 - 본조사 前 부처에 조사방법 및 지침 개선 등을 위한 표본 추출 파일럿 조사 제안 - 상속 농지 및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지관리 방안 등 부처 및 국회에 건의 ○ (향후계획) 농지제도 개선 TF의 최종 핵심의제(안)의 공론화(정책토론회 등)
3. 기후위기 대응 식량 주권 강화	○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 부처 등 8명 TF 구성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연구용역 발주 ○ (향후계획)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소분과 운영, 의견수렴 공론화를 위한 토론험담회 등 추진
4.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	○ 친환경관련 단체, 전문가, 자문위원 등 13명의 TF 구성 - 논의 주제 선정 및 세부 목표 설정 * 수계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재설계, 국산 농산물 의제매입 비중제고 ○ (향후계획)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리하여 의결 안건 마련
5. 축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	○ 축산 관련 단체, 전문가, 자문위원 등 14명 TF 구성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논의 *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축분뇨 활용 체계 구축 ○ (향후계획) 축종별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취합 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 경축순환농업 관련 안건 초안 작성 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보완
6. 청년농포럼 운영	○ 회원 관심 주제 6개 분야 조별 구성. 전체회의 5회 진행 - 참여회원 청년농 관심분야 조별 모임 진행 및 발표 ① 농업 인력구조 및 세대전환 전략, ② 농지 제도 및 소유이용 구조개편, ③ 주거 안정 및 농촌 정착 인프라, ④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시스템, ⑤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⑥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미래 대응 ○ (향후계획)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청년농포럼 제6차 진행 : 7. 21.(화)

1 농업인 기준 재정립 방향 합의 및 공론화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업 형태의 다변화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농정의 필요가 증가하면서 정책 대상 농업인 인정 기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 추진 현황

- (방향) 농정 구조의 문제 및 공동 현실 진단을 통해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편익과 목적, 재정립 기준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추진
- (활동)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목적 및 기준 설정, 정책 수요 식별 방안 방향성 합의를 위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추진
 - 농업인 기준 재정립의 배경, 목적, 효과, 문제점 등 논의(1차 회의, '26.3.16.)
 - ※ 농업인 자격(3층 구조로 구분) : 기본농업인(법률상 농업인)>직업농업인(전업농)>미래농업인(진입 초기 농업인, 예비 농업인)
 - 선행 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및 개편 방향 논의(2차 회의, '26.4.7.)
 - ※ 농민(전통적, 사회적 의미)>농업인(농업식품기본법에 근거)>농업경영인(정책 대상자)
 - ↳ 농업인 정의는 넓게 갖되 정책 지원 대상이 되는 농업경영체는 정책별로 기준 마련
 - 농업경영체 제도의 실태 및 개선과제 논의(3차 회의, '26.4.23.)
 - ↳ 더 넓은 개념인 농업인을 경영체의 한 부분으로 정의하는 오류
 - 농업계 합의 및 사회협약 추진 방향 논의(4차 회의, '26.5.19.)
 - ↳ 농업인 정의 및 정책 대상 체계에 대한 논의는 '농업계 방향성 합의-사회적 공론화-실제 정책·행정·법률체계의 정비'가 유기적으로 연결
 - 공동 현실 인식 및 농업계 방향성 합의를 위한 단체별 의견 수렴(5차 회의, '26.6.2)

주요 의견

- 정책 지원 대상 기준 재정립 필요성은 동의
- 우선 개선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대상(영역)은 실제 농업활동 종사자 보호
→ 실경작 증명 방법(매출증빙, 출하량 등)을 다양화 할 필요

- 농업인 기준 재정립 설문 기획 회의 2회('26.6.15., '26.6.22.)
 - ↳ 기본 방향에 대한 의견, 농업인 기준 및 제도에 대한 인식 등

□ 향후 계획

- '농업인 기준 재정립' 농업인 대상 의견조사 : '26. 7. 20.까지
 - * 설문지 및 URL 병행, 표본 수 666명 이상(주요 농민단체 회원)
- 의제 관련 방향 및 내용 보완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계속)
-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간담회 등 추진 : '26. 8월~11월

2 농지제도 개선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LH사태 및 농지법 개정('21.7.) 이후 농지의 유동성 저하*와 농지 소유·이용·전용 전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제도개선 필요
 - * 농지거래량 : '19년(39,237ha) → '20(46,306) → '21(50,948) → '22(36,332) → '23(25,346)
- 인구감소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으로 농지보전·이용의 상반된 의견 지속속출

□ 추진 현황

- 농지제도 개선 TF 구성 * 10명(농민단체 3, 연구 2, 시민 1, 법률 2, 행정 2)
 - 농지의 소유·이용·보전 등 의제 논의 및 토론 등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위원 회의를 통한 11개 의제 선정, 주요 쟁점 위주로 집중논의 후 과제로 확정
 - * 농지 세제, 농지 임대차 제도, 농지관리전담 기구, 농지정보 종합 DB구축 등
- 주요 실적
 -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농지 종합 DB구축 필요 농식품부에 제안('26.1.21.)
 - * 대통령 경자유전 원칙을 위한 농지 전수조사 부처에 지시('26.2.24)
 - 농지 전수조사 예상문제점 등 현장 의견 수렴 및 부처 전달
 - * 제주도 농업인단체, 경기도 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살림 등 의견 수렴
 - 본 조사 前 부처에 조사방법 및 지침 개선 등을 위한 표본 추출* 파일럿 조사 제안
 - * 토지거래허가구역, 경매취득자,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농지,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등
 - 상속 농지 및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지관리 방안 등 부처 및 국회 등에 건의
 - * 상속 농지의 농지법(제23조제1항7호) 개정,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시 위원회 건의 내용 반영
 - 11개 의제 중 핵심의제 4개로 최종 안건으로 선정
 - * 농지 세제, 농지임대차 제도, 농지관리전담기구 및 농지종합 DB구축, 농업진흥지역 관리 정책

□ 향후 계획

- 농지제도 개선 TF의 최종 핵심의제(안)의 공론화(국회토론회 등) : 8.3~9.9 총 5회
- 농업분과위원회의 개선안 검토 및 본회의 상정 : 10월
- 관련 부처 등 정부에 전달 및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추진 : 10월

참고

농지제도 개선 핵심의제(안)

구분	11개 의제	논의를 통한 조정	핵심 의제(안)
농지 소유 (3)	1-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개편	■ 농지 세제 개편 ^①	① 농지 세제 개편 (공론 국회토론회 8/12) ○ 8년자경 양도세 감면 폐지(시행일 현재 8년 자경자는 기존 혜택부여) 및 농지의 자경에서 농업적 이용 유지로 요건 변경, 농지의 10년이상 보전된 농지(자경 또는 농지은행 위탁)에만 양도세 감면 혜택 부여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까지 공제 적용, 인센티브를 제공 ○ 농업진흥지역 농지+농업경영체 등록(한국농어촌공사 임대차 신고) 시 분리과세 유지 및 재산세율(0.07%→0.05%)로 추가 인하 ○ 농지세제 개편 검토를 위한 농식품부와 기재부 공동 연구 용역 필요(데이터 기반 세제 검토)
	1-2 상속·이농 농지 체계적 관리	■ 법령 개정 완료	
	1-3 농지 비담보 중심의 금융제도 설계	■ 금융제도 부분에서 논의	
농지 이용 (1)	2-1 농지임대차 제도 현실적 개편	■ 농지임대차 제도 개편 ^②	② 농지임대차 제도 개편 (공론 국회토론회 8/3) ○ 경자유전 원칙을 법률유보한 농지법 개정으로 임대차 양성화 ○ 실경작자 보호를 위해 실경작자 구제 특례 조항 및 친환경 농업 임대차 특별조항 신설, 임대차 양성화와 임대 기간·운영·인센티브 제공 등 ○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질화 해 농지보전과 합리적 이용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농지소유법’, ‘농지보전관리법’, ‘농지이용법’ 등 기능별 법체계 정비가 필요
농지 보전 관리 (7)	3-1 지역 특성 고려, 농지정책 차등 적용	■ 의제 3-1, 3-3, 3-4 통합 개선안 도출 ^④	
	3-2 농지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 신설 등	■ 농지관리전담기구 설치 ^③	
	3-3 농업진흥지역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	■ 의제 3-1, 3-3, 3-4 통합 개선안 도출 ^④	③ 농지관리전담기구 신설 및 농지 종합 DB구축 (공론 국회토론회 8/26) ○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업무, 지자체의 농지위임 사무 등을 농지관리 전담기구로 이관, 농업경영체육성, 직접지불, 농지의 보존·이용·직접 기능 수행-농지관리전담기구 조직 구성(중앙·시군 2단계로 구성, 읍면 및 마을단위 농지관리위원회를 거버넌스로 개편) ○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관원의 장점을 살려 기능을 통합 확대해 활용 방안도 대안적 검토 ○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관리실태 등의 농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한 농지정보 종합 DB시스템 구축
	3-4 농업진흥지역 총량 관리	■ 의제 3-1, 3-3, 3-4 통합 개선안 도출 ^④	
	3-5 행정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지 관리 체계 마련	■ 법령 제정 완료	
	3-6 농지이용 현황 등 농지DB 구축	■ 농지 종합 DB구축 ^③	④ 농업진흥지역 관리 정책 (공론 국회토론회 8/19) ○ 농지보전부담금의 m ² 당 5만원 상한액을 폐지(농업진흥지역은 상한액 폐지, 농업진흥지역 밖은 m ² 당 10만원으로 상향 조정) ○ 농업진흥지역 내 공공분야(도로, 하천 등)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50% 감면 또는 100% 부과로 조정 ○ 농지보전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농지 평가지표 체계 마련 ○ 지역특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에 농촌소멸위험지표(인구와 거래회전율 적용)를 제공, 소멸위험이 높은 읍면단위 지역에 한해 비농업인에게 주말체험농목 목적의 농지 취득 허용 ○ 은퇴·이농농지 매입지원 등
	3-7 영농형 태양광 도입, 농지이용 제도적 기반 마련	■ 재생에너지 특별 위원회에서 논의	

3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및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여 해외 공급망 중심의 식량안보 정책에서 생산자와 지역사회가 결정하는 식량주권 관점에서의 정책 전환 방향 모색
- 식량주권 개념을 국내 여건에 맞게 재정립하고, 생산자·공급자 및 소비자·시민사회와 폭넓은 연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중장기 농식품 정책체계 제안

□ 추진 현황

- 국제 정세변화에 대응한 식량주권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TF 구성
 - (구성) 단장 포함 농업 관련 단체, 전문가, 부처 등 8명
 - (역할)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
 - * 기후위기 대응 식량주권 TF팀 전체회의 2회, 연구용역 방향 기획회의 2회
- 농업생산의 안정성 및 식량주권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추진
 - (용역명)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
 - (예산액) 30백만원(일반회계 연구개발비), 일반경쟁입찰
 - 연구용역 제안 내용
 - 식량주권 개념 정립 및 국내 여건 맞춤형 이론화
 - 국내 주요 곡물 수급상황 및 기존 자급률 목표 관리체계 분석
 - 해외 주요국의 식량 시스템 정책 및 제도적 관리 사례 분석
 -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등

□ 향후 계획

-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소분과 운영 : '26. 7월 ~
-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간담회 등 추진

4 농업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친환경농업 확대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친환경농업은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하며, 탄소중립실현의 중요한 수단
 -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재배면적 2배 확대* 추진 * ('24) 38천ha → ('30) 75
- 친환경농업의 양적성장이 정체되어 있고, 친환경 농산물의 관행 농산물 대비 높은 가격과 낮은 접근성으로 소비확대가 곤란

□ 추진 현황

- 친환경농업 이슈 및 정책점검을 통한 재배면적 2배 확대를 위하여 농민단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친환경농업TF 운영
 - (구성) TF 단장 포함 친환경관련 단체, 전문가, 자문위원 등 13명
 - (역할)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등
- 논의 주제 선정 및 세부 목표 설정
 - ①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방안
 - ☞ 수계지역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
 - * 조림지역 친환경방제 실천, 관행농사에서 친환경 농지로 전환 등
 - ② 농업환경보전형 직불금 통합 개편 방안
 - ☞ 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재설계
 - ③ 가공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 ☞ 국산 농산물 의제매입 비중제고

□ 향후 계획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정리하여 의결 안건 마련
- 부처에 의견수렴 후 농업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본회의 상정

5

축산물 공급 안정을 위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 방안

□ 현황 및 문제점

- 악성질병*, 생산비 증가**, 환경규제 강화***, 동물복지 확대**** 등 국내 축산업 여건 악화로 축산 정책점검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

* (악성질병) ASF,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지속적 확산

** (사료비, '23) 송아지 9.2%, 우유 3.2%, 비육돈 2.8%, 계란 7.4%, 육계 6.0% 증가

*** (환경규제) 분뇨 정화처리 비중 확대('30년까지 25%), 약취배출시설 기준 강화 등

**** (동물복지) 두당 사육면적 증가, 동물복지 인증 도축장 수 제한 등

- 축산질병, 사료비 증가, 가축분뇨 발생량 급증, 동물복지 확대 등으로 인해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음

□ 추진 현황

- 축산분야 이슈 및 정책점검을 통한 축산업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단체, 정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축산TF 운영

- (구성) 축산 관련 단체, 전문가, 자문위원 등 14명

- (역할) 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 등

-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점추진과제 선정 및 논의

- (추진과제) 경축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축산자원 고도화 방안

- (주요내용) 가축분뇨의 이용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축분뇨 활용 체계 구축* 등

* 국가단위 토양양분관리 계획 수립, 퇴·액비 이용촉진 제도 개선,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교육·홍보·연구 등

□ 향후 계획

- 축종별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을 취합 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
- 경축순환농업 관련 안건 초안 작성 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보완
- 부처에 의견수렴 후 농업분과위원회 검토를 받아 본회의 상정

6 청년농 포럼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속가능한 3농^(농어민·농어업·농어촌) 전략을 새롭게 설계하고, 현장과 소통·협력을 통한 농업대전환 필요
- 새정부 국정과제인 농업 세대전환을 위해 갈등 해소와 합의가 필요한 과제 발굴과 사회적 합의 거버넌스 구현

□ 추진 현황

- (현황) 회원 관심 주제 6개 분야 조별 구성. 전체회의 5회 진행
- 조별 자체 스터디 및 토론·논의 → 포럼 전체 발표 → 의제화
- (관심주제) 참여회원 청년농 관심분야 조별 모임 진행 및 발표
 - ① 농업 인력구조 및 세대전환 전략
 - * 청년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체계 구축, 멘토-멘티 시스템 개선 등
 - ② 농지 제도 및 소유·이용 구조개편
 - * 농지 정보 비대칭 해소와 순환 촉진 방안, 농지연금 및 직불금 개선 등
 - ③ 주거 안정 및 농촌 정착 인프라
 - * 농촌에 들어오라는 일방적인 권에서 벗어나 농촌에 살 수 있게 만드는 생활권 생태계 조성
 - ④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시스템
 - * 청년농이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적 전문성을 뒷받침하는 구조 지향
 - ⑤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 ⑥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미래 대응

<청년농포럼 현황>

- 구성 : 청년농업인단체 대표 등 청년농 17명
- 운영기간 : '25년 12월 ~ '26년 12월(12개월간)
- 운영방법 : 매월 1회 * 참여위원 자체 수시 토론회 별도 진행
- 운영방식 : 전문가, 선배농업인 등을 자문위원으로 초청하여 간담회 진행
- 결과환류 : 의제 안건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향후 계획

- 농업 세대전환을 위한 청년농포럼 제6차 진행 : '26. 7. 21.(화)
- 논의 안건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간담회 및 토론회 운영

구분	주요 내용
① 농업 인력구조 및 세대전환 전략	- (청년농 현장 상황) 현재 농업 유입은 정착 지원금 등으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정착 단계의 지원이 부족, 기성세대 은퇴 불안정 - (질적 고도화 및 성과 관리) 단순 유입에서 벗어나 성과 지표(KPI) 도입하여 성과가 좋은 청년농이 기업농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는 체계 구축 필요 - (무형 자산 중심의 승계) 농지·시설 등 유형 자산뿐만 아니라 선배 농업인이 쌓아온 유통 라인, 인맥 등 '무형 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 (안전한 은퇴 및 사회보장) 선배 농업인의 명예로운 퇴장을 위해 사회보장형 퇴직연금 도입, 직불금 일부를 연금 자금으로 유보하는 방안 - (직업적 지위 안정화) 농업인을 프리랜서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등록 가능한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받게 하여 실업급여 연계 및 국비 교육 혜택을 확대해야 함 - (멘토-멘티 시스템 개선) 농업판 '링크드인'과 같은 통합 정보 플랫폼을 통해 양질의 멘토 풀을 관리하고, 멘토와 예비농 간의 매칭 및 상호 평가 시스템 도입 의견 제시
② 농지 제도 및 소유·이용 구조개편	- (농지 정보 비대칭 해소) 외부 유입 청년농은 양질의 토양 정보를 알기 어려우므로, 농지은행이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거래 정보 및 토양 상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함 - (농지 순환 촉진) 투기성 농지 적발 시 농지은행이 이를 회수하여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고, 고령농의 경영 이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함 - (농지 연금 및 직불금 개선) 현재 낮은 참여율을 보이는 경영이양 직불금과 해약률이 높아지는 농지 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편(연령 상향 등)이 필요 - (장기 임대 및 이용 계획) 청년농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농지 임대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확대하고, 26년간 방치된 시·군·구 농지 이용 계획 수립에 법적 구속력 부여
③ 주거 안정 및 농촌 정착 인프라	- (농촌 정착의 3대 장벽) · (주거) 살 만한 빈집이 절대적으로 부족 · (금융) 농업 소득 증빙 어렵고 창업 자금이 가계대출로 분류, 자금줄이 차단 · (생활 인프라) 의료, 교육, 편의시설 부재로 가족 단위 거주를 포기 - (거주지 예외 인정) 인구감소지역에서 시내(동 지역)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더라도 농촌 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규제 개선 필요 * 어디서 자는가에서 어디서 일하는가로 정책 전환 필요

	- (청년농 스테이) 폐교나 폐모텔을 리모델링하여 1인 1호실 ‘개별 주소지’가 부여되는 분산형 기숙사 공급 및 연차별 임대료 감면 지원 필요 - (금융·제도 개선) 농협 출하 증명 등 연관 자료를 활용한 실소득 추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공식 소득증빙서 발급 및 대출 제도 개선* * 청년창업농 대출을 가계대출에서 사업자금으로 재분류하여 대출한도 복원 - (농촌 서비스 직불금) 면 단위의 빈 건물을 활용하여 편의시설을 운영 * 지자체에서 매입/리모델링하여 필수 업종 무상임대, 운영비 일부 보전하여 인프라 유지
④ 거버넌스 및 정책 추진 시스템	- (농업정책 검토 위원회) 민-관-학이 참여하여 신규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사전 평가하고 불합리한 보조사업 규제를 상시 수정하는 기구 도입 - (농무사 제도) 복잡한 농지법·건축법 등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기관 간의 복잡한 행정을 중재하는 국가 공인 전문 가격사 도입 - (농업분야 공무원 인사 개혁) 단기 순환 보직을 지양하고 최소 보직기간 의무화 및 농업 전문관 제도 활성화 - (해외거버넌스 주요 사례 및 시사점) · 프랑스(시도할 권리) : 청년농 조직(CNJA)이 농정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며, 초기 실패시 개인 부채를 최소화하는 안전망 설계 · 일본(단계적 온보딩) : 농지뱅크를 통한 장기 임대와 국가-지자체-농협이 연계된 삼중 지원 체계 운영 · 네덜란드(지식 네트워크) : 바헤닝언 대학교와 지식네트워크(AKIS)가 농업 부와 협업하는 황금 삼각형 구조를 통해 전문성 강화 · 공통 시사점 : 청년농의 공식적인 농정 참여 구조를 확립하고, 농지 및 자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임
⑤ 금융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개선	* 7월 조별 발표 예정
⑥ 농업의 사회적 가치 및 미래 대응	* 7월 조별 발표 예정

Ⅱ. 수산업분과위원회

<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수산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 추진현황 - 스마트 수산 TF 구성('26.5) - 1차 TF 회의('26.6.15) : 국가 전력체계 지속가능성과 어가 경영부담을 균형있게 반영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도출 필요성 논의, 정책 연구용역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향후계획 - 수산분야 전기 사용현황 분석, 개선방안 검토, 신재생에너지 전환방안 등이 담긴 정책연구용역 본격 추진('26.7~) - 2차 TF 회의('26.8/잠정) : 정책연구용역 자문, 공론화 방안 등 논의
2. 청년수산인 포럼 운영	○ 추진현황 - 청년수산인 포럼 구성('26.5) : 어업·양식·가공 등 분야 청년 및 자문위원 - 1차 포럼('26.7.7) : 청년수산인이 겪는 애로사항의 체계적 발굴 필요성에 따라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진행에 합의, 청년수산인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기 위한 전국단위 협의체 구성 추진 ○ 향후계획 - 2차 포럼('26.8/잠정) : 전국단위 협의체 추진방안, 수산특화형 병역 대체복무제도 연구방안 등 논의
3. 김 산업 발전방안 마련	○ 추진현황 - 김산업 발전 TF 구성('26.6) - 1차 TF 회의('26.7.15) : K-food Gim의 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관리 체계 구축,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 등 논의 ○ 향후계획 - 2차 TF 회의('26.8/잠정) : 기후변화 대응 품종 개발방안,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등 세부 발전방안 후속 논의
4. 원양산업 발전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원양산업 발전 TF 구성('26.6) - 1차 TF 회의('26.7.21) : 원양산업 관련 법·제도 현안 점검, 경영 안정화 방안 등 논의 ○ 향후계획 - 2차 TF 회의('26.9/잠정) : 1차회의 후속조치 논의
5. 수산 타운홀 미팅 추진	○ 추진현황 - 전국단위 행사를 시작으로 서남해·남동해·제주 등 권역별 간담회를 순차 개최하고, 정책브리핑 및 현장 의견수렴 추진('26.9~10) ○ 향후계획 - 세부 행사 추진계획 마련('26.7)

1 수산분야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요금 인상) 양식장은 위생, 수온 유지 등을 위해 사계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구조이나 최근 급격한 전기요금 상승으로 어가 경영부담 가중

* 수산분야 총 사용량 중 양식업(해수면·내수면 양식업·종자생산업)에서 약 98% 사용('23년 기준)

- 양식업은 국내 수산물 생산량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바, 전력비 상승에 따른 생산 위축시 식량안보 및 수산물 수급 안정성 저해 우려

구분	인상 현황
농사용(을) 전기요금	'22년 34.2원/kWh → '26년 65.9원/kWh로 약 93% 인상
어가당 연간 평균 전기요금	22년 1,276만원 → '24년 1,773만원으로 약 42% 인상

- (산업구조 변화) 양식업은 최근 고령화,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전력 소비가 많은 스마트 양식으로 전환 중이나, 전력요금체계 상 고려 미흡

□ 추진현황

- 스마트 수산 TF 구성('26.5) 및 제1차 TF 개최('26.6.15)
 - 상시 전력사용이 필수적인 산업구조를 고려, 국가 전력체계 지속가능성, 어가 경영부담 등을 균형있게 반영한 개선방안 도출 필요성 합의
 - 양식업 전기 사용현황 분석, 전기요금 개선방안 검토, 요금 감면·신재생에너지 전환 등 대안정책 등 도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추진

□ 향후계획

- 정책연구용역 추진('26.7~)
- 제2차 스마트 수산 TF 개최('26.8, 잠정)

2 청년수산인 포럼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 71번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내 어촌 활력을 위한 청년 어업인 육성 포함
- 청년수산인 대상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어촌소멸 대응을 위해 관련 의제를 중점 발굴·논의하는 '청년수산인' 주도 협의체 운영 필요

□ 추진현황

○ 청년수산인 포럼 구성('26.5)

- (구성) 어업·양식·가공 등 분야 청년수산인 및 자문 14인(해수부 1인 포함)
- (활동계획) 청년 관련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및 정책건의, 전국 단위 청년수산인 협의체 구성, '수산 특화형 병역대체복무제도' 관련 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현장 의견 청취 등

○ 제1차 청년수산인 포럼 개최(26.7.7)

- (개선과제 발굴·토론) 청년수산인이 겪는 제도적 한계와 애로 사항의 체계적 발굴 필요, 설문지를 통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 논의
- (전국단위 협의체 신설) 청년수산인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대변 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혁신을 이끌기 위한 전국단위 조직화 추진

□ 향후계획

○ 제2차 청년수산인포럼 개최('26.8, 잠정)

3 김 산업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배경 및 목적

- 김 산업은 수출·생산·가공·유통이 긴밀하게 연계된 복합산업으로 기후변화·국제경쟁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 논의 필요성 증대

☐ 추진현황

- 김산업 발전 TF 구성('26.6) 및 제1차 TF 회의 개최('26.7.15)
 - K-food Gim의 식품안전성 확보와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 김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기관 설립 필요성 논의
 - 기후변화 대응 위한 품종 개발, 수출·생산·가공·유통을 집약한 스마트 클러스터 조성 등 김산업 발전 세부사항 후속 논의 합의

☐ 향후계획

- 제2차 TF 회의 개최('26.8월, 잠정)

4 원양산업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배경 및 목적

- 수온 상승 및 어장 이동 등으로 원양어업 생산 불확실성이 증대, 선박 노후화 및 국제규제 강화 등으로 우리 원양업계 경쟁력 저하

☐ 추진현황

- 원양산업 발전 TF 구성('26.6) 및 제1차 TF 회의 개최('26.7.21)
 - 원양산업 경영안정화 방안 논의 등 현안 발굴 및 정책대안 논의

☐ 향후계획

- 제2차 TF 회의 개최('26.9월, 잠정)

5 수산 타운홀 미팅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해수온 상승, 어종 서식지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어촌 소멸 등 수산 현장의 위기 타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양방향 소통채널을 통해 해역별로 상이한 수산업 현안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 수립에 반영 필요

□ 행사 개요

- (행사명) 수산 혁신을 위한 타운홀 미팅
- (방식) 첫 행사는 전국 단위의 대규모(수산업분과위 신설 기념)로 개최하고, 이후 세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규모 권역별 간담회 운영
- (시기 및 지역) '26.9~10월(2개월) / 전국·서해권·동해권·제주권

시기	대상지역
'26.9월 첫째주	전국
'26.9월 셋째주	서남해권(경기·인천·충청·전라)
'26.9월 넷째주	남동해권(강원·경상·울산)
'26.10월 첫째주	제주

- (참석) 어업인 및 단체, 유관기관, 수산업분과위, 전문가 등
* 잠정 참석인원 : (대규모) 약 150~200여명, (소규모) 권역별 약 50여명

□ 주요내용

- (정책브리핑) 수산분야 정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수산분야 정책), 위원회(수산업분과위 추진 안건)
- (의견수렴) 현장 질의·응답 및 종합 토의, 건의사항 수렴

□ 향후계획

- 세부 행사 추진계획 마련('26.7)

Ⅲ. 임업분과위원회

<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임업세제 개선 방안	○ 추진현황 - 임업에 대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2회) - 임산물생산업의 직불제 및 세제 불공정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26. 7.) ○ 향후계획 -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구성 및 운영 * 불합리 개선(안) 마련 및 심층 논의,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26. 9.)
2.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 추진현황 -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워킹그룹 구성·운영(1회) - 산촌지역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26. 6.~10.)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중간·최종 보고 및 현장조사·전문가 자문 추진(~10월) * '산촌의 정의' 개선 및 '산촌특화지구' 도입 등 법 개정(안) 마련 -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11월)
3. 산촌 복지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중장기 방안 논의	○ 추진현황 - 숲 활용 복지서비스 TF 구성을 위한 논의 추진 중 * 구성계획 : 숲 전문가, 의료, 산업인력공단, 통합돌봄 관계자 등 ○ 향후계획 -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정책용역)'과 연계 검토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산림청) 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건강 관리 서비스 관련 지침 정비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12월)
4. 임업과 산촌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 추진현황 - 위원회의 현장 직접 소통으로 정책 수혜자인 임업인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범부처 협업 동력 확보를 위하여 임업 타운홀미팅 개최 * (일자/장소) '26. 6. 25.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참석) 임업인 등 150여명 ○ 향후계획 - '산림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 (일자/장소) '26. 8. 24. / 전남·여수, (참석) 관계 부처, 지자체 및 주민 등 - '임업의 사회적 합의 TF' 구축 및 본격 논의 추진 *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토론으로 국민 소통(10월말)

1

임업경영 안정을 위한 직불제 · 임업세제 개선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황) 임업은 타업종에 비해 직불제 규모가 작고, 각종 세제도 경영 활동이 아닌 지목에 따른 차별로 인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음
 - * 임업 관련 세제 및 규제는 각종 임산물 생산보다 조림·육림·벌채 위주로 형성
- (문제점) 산지 보전 중심의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 제도로 인해 지속 가능한 이용 및 산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음

□ 추진현황

- 임업에 대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운영
 - 임업부문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타 업종과 비교 논의
 - * (1차) '26. 5. 26. 우선 논의 대상 결정, (2차) '26. 6. 8. 이슈페이퍼 작성범위 결정
- 임산물생산업의 직불제 및 세제 불공정에 대한 이슈페이퍼 작성('26. 7.)
 - 임업 안에 재배형 임산물, 채취형 임산물, 육림 · 산림경영 · 벌목 · 목재생산 · 임업서비스가 함께 묶여 있어 각각의 차별성 미반영
 - 동일 품목을 농지와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차별 개선
 - 임산물 생산활동이 확인되는 산지는 생산수단으로 인정하여 세제 개선

□ 향후계획

- 임업의 불합리 개선 TF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임산물생산업에 대한 세제 및 직불금 개선(안)' 심층 논의 추진(~9월)
- 국회 토론회 등 공론화(~9월말) 및 본회의 의결 안전화 추진(~10월)

2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산촌정책 체계 개편

□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황) 산촌은 국토의 43.5%를 차지하나, 인구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소득수준도 타 업종 대비 최저**
 - 농어촌에 비해 산촌의 고령화 심각, 40대 이하 연령층 지속 감소
- * 65세 이상 고령인구: 농가 52.6%, 어가 48.0%, 임가 52.8%(‘23년 농림어업조사, 통계청)
- ** 가구당 평균소득(‘24, 백만원) : (전국) 72 > (어가) 64 > (농가) 51 > (임가) 38
- (문제점) 산림·환경·관광 등 규제 및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으로 산촌경제 활성화 및 규모화·산업화 등 발전적 활동에 장애

□ 추진현황

-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워킹그룹 구성·운영
 - ‘산촌의 정의’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개정의 필요성 논의 등
 - * 「산림기본법」의 가변적인 ‘산촌의 정의’를 지속 가능한 정책 실현 공간으로 개정 필요
- 산촌 규제 적용실태 분석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 연구용역(‘26. 6.~10.)
 - 산촌 지역의 규제 적용 구조 및 쟁점을 정리·분석
 - 규제 충돌 및 청년 정착 저해요인 도출하고 법령 정비안 제시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중간·최종 보고 및 현장조사·전문가 자문 추진(~10월)
-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임업분과위원회 논의 안건 마련
 - ‘산촌의 정의’ 개선 및 ‘산촌특화지구’ 도입 등 법 개정(안) 마련
-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11월)

3 산촌 복지서비스의 사회보장제도 편입 중장기 방안 논의

□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황)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로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급증하는 추세이고, 농산촌 사회보장 혜택은 미미한 수준
 - 농산촌 복지시설(치유원, 마을시설 등)은 정신·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음
- * 건강보험 지출규모 : ('17) 63조 → ('24) 98조 / 적자규모 : ('24) 5조원
- ** 예방효과 검증 : 혈압(서울대·산림과학원, 2022), 우울·불안(산림치유원, 2022) 등
- (문제점) 농산촌 복지시설이 의료·건강서비스와 연계가 되지 않아 농산촌 사회보장 혜택이 부족하고 농산촌 경제 활성화 저해

□ 추진현황

- 숲 활용 복지서비스 TF 구성을 위한 논의 추진
 - 농산촌 복지시설의 건강분야 기능을 '공공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 숲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활성화 및 의료·건강서비스 연계 방안 논의
- * 구성계획 : 숲 전문가, 의료, 통합돌봄 관계자 등

□ 향후계획

-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정책용역}과 연계 검토
 - 현장 확인, 이해관계자 토론,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 추진
- 관계부처(보건복지부, 산림청) 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지침 정비 등을 위한 구체적 계획 수립(~12월)

4

임업과 산촌 활성화를 위한 소통 강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후위기 및 인구소멸에 따른 산림·임업의 역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의 목소리 청취하여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임업인, 비 산림 관련 부처, 환경단체 및 시민과의 단계별 소통을 통해 임업 경영 및 산촌 활성화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① 임업인	② 범부처 등	③ 시민·환경·이해관계자
산림·임업활성화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통한 소통	▷ 부처 경계를 넘어선 산림재난 효율적 대응방안	▷ 임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토론회 등 공론화

□ 추진현황

- 위원회의 현장 직접 소통으로 정책 수혜자인 임업인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범부처 협업 동력 확보를 위하여 임업 타운홀미팅* 개최
 - * (일시/장소) '26. 6. 25.(목) 14시 / 한국산림복지진흥원(대전), 임업인 등 150여명 참석
 - 임업인 등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개선 요구사항을 폭넓게 확인
 - 대부분 임업분과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연관된 사항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시사

□ 향후계획

- '산림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 참고 : '산림재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계획(안) 》

- (일자·장소) '26. 8. 24.(월) / 전남·여수(소노캄)
- (운영방식) 정부의 재난대응 사례와 민간(또는 지역)에서 바라보는 산림재난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주제 발표, 환경·안전·국토·임업인·일반주민 등 각 분야 지정토론 등
- (참석대상) 정부 각 기관,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 임업인 등 100여 명

- '임업의 사회적 합의 TF' 구축 및 본격 논의 추진

- 산림의 보전과 이용(경영)에 대한 입장 차이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
-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 토론으로 국민소통(10월말)

IV. 농어촌분과위원회

<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 (추진현황)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소분과(TF)' 운영 및 연구용역 병행으로 안건 마련 추진 중 - 1차 회의 추진(6.26) : 안건 상세내용* 및 소분과 운영계획 용역 설계 보고 등 *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인 '읍·면 중심 자치 모델'에 주안점을 두고 안건 마련 - 2차 회의 추진(7.16) : 안건 관련 기존 농특위 의결과제·연구용역 검토,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주요 쟁점 등 ○ (향후계획) 연구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현장토론회, 정책세미나 등 추진하여 정책 대안 발굴
2.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 (추진현황) '통합돌봄 TF' 설치·운영(5.14.) 및 연구용역 운영('26.7.)으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정책 모델 설계 추진 - 기획자문회의(5.21.) :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부처 간 협업 모델 도출 및 선도적 마중물 연구 추진 - 1차 회의(6.17.) : TF 안건 구조화 논의, 연구용역 실행 로드맵 발표 및 통합돌봄 지역 활동 사례 공유 - 연구용역 착수(7.3.) 및 1차 현지 실사 추진(7.20.~7.22., 충남 청양군) ○ (향후계획) TF 회의·연구용역·현장 간담회 등을 통한 통합돌봄 정책 도출
3.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연구	○ (추진현황) 지역단위 통합형 농어촌 정책 추진체계 모색을 위한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TF' 운영 및 연구용역 추진 병행 - TF 제1차 회의(6.2.) :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TF 운영방안 논의 - 권역별 토론회* 추진 : 지역 현장 의견수렴 및 정책수요 발굴 추진 * 7.8.(수) 호남권(전북 김제), 8.5.(수) 강원·충청권(서울), 8.12.(수) 영남권(경북 청도) ○ (향후계획) 정책연구용역 현장조사 및 권역별 토론회 추진 등을 통한 정책 방안 도출 및 안건 마련
4.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모색	○ (추진현황) 연구용역 추진과, 자문 위원(TF) 구성하여 관련 조항 개정(안) 도출 중 - 관련 조항 분석, 가치 설정, 개정(안) 검토 및 논의 등 회의체 운영 - 대국민 여론조사 완료, 개정(안) 및 보고서 초안 완료 ○ (향후계획) 여론조사 결과 활용한 국회 토론회로 공론화 추진

1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공동체 기반이 약화되고 있으며, 기존 행정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지역 문제 대응에 한계 존재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제도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어촌 특성을 반영한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의 실행체계 정비 필요

□ 추진현황

- 농어촌형 주민자치 기반 거버넌스 구축 소분과(TF) 운영방안 논의를 위한 1차 회의(6.26.)

◇ 정책연구 관리 및 종합 정리, 논의 결과를 반영한 운영체계 마련 및 실행 가능한 정책 모델 도출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소분과(TF) 설치·운영

- 추진 안건 상세내용* 및 소분과 운영계획(TF 단장 구자인), 정책 연구용역 설계보고 및 연계 방안, 향후계획 등 논의
- * 주민자치 거버넌스의 핵심인 '읍·면 중심 자치 모델'에 주안점을 두고 안건 마련, 5대 영역의 당면 과제 제시 → ①농어촌형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②읍·면 행정의 정책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③주민 주도 읍·면 발전계획 수립, ④주민 읍·면 현장 기반 실행법인 육성, ⑤행정리 기반의 마을자치회 구성과 운영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추진과 병행하여 TF 주관하는 현장토론회, 중간보고회, 정책 세미나 등 추진하여 개선 과제 공유 및 정책 대안 발굴
- '농어촌형 주민자치회 실질화를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예정(7.22, 대전)
- 농어촌분과위원회 안건 심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26.12월)

2 농어촌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발전방안 마련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어촌 지역은 급속한 고령화, 인구감소, 정주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돌봄수요에 비해 서비스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구조적 특성 존재
- 이에 기존 통합돌봄 정책 및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정책 모델 도출 필요

□ 추진현황

- 통합돌봄 TF 설치·운영(5.14.) 및 기획자문회의 운영(5.21.)
 - 다양한 내외부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부처 간 협업 모델 도출 및 선도적 마중물 연구 추진

◇ 통합돌봄 관련 연구 및 정책 내용 종합 정리, 논의 결과를 반영한 농어촌형 통합돌봄 운영체계 정비 및 정책 개선 방안 마련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에 따라 “통합돌봄 TF” 설치·운영

- 통합돌봄 TF 안전 구조화 논의를 위한 제1차 회의 운영(6.17.)
 -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절성과 부재 지점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모델 도출 추진
 - 연구용역 실행 로드맵 발표 및 통합돌봄 지역 활동 사례 공유

* 사례 공유 : 여민동락공동체 권혁범 대표, 인권연구소 창 류은숙 소장

- 통합돌봄 연구용역 착수(7.3.) 및 1차 현지 실사 추진

구 분	일 정	지 역	장 소	비 고
▪ 사례 조사 (1)	7. 20.(월) ~ 7. 22.(수)	충남 청양군	군청, 보건지소·의료원, 복지관, 경로당 등	
▪ 사례 조사 (2)	7. 28.(화) ~ 7. 30.(수)	경남 산청군		
▪ 사례 조사 (3)	8월~9월 중		추후 선정	

□ 향후계획

- 제2차 통합돌봄 TF 전체회의 개최(7.24.)
 - 정책연구용역 1차 현지 실사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안전 구체화 논의
- 농어촌분과위원회 안전 심의 및 본회의 안전 상정(‘26.12월)

3 농어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마련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어촌정책은 부처별·사업별로 개별 추진됨에 따라 정책 간 연계 부족과 지역의 복합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
 - 개별 사업 중심 정책 추진에서 나아가 지역 특성과 주민 생활수요를 반영한 지역 단위의 통합적·종합적 정책 운영체계 마련이 필요
- 이에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단위의 통합적 정책 체계를 마련하고 정책과제 도출

□ 추진현황

-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TF 구성·운영(5.29.) 및 제1차 회의 개최
 -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TF 운영방안 등 논의(6.2.)
 - 연구용역과 연계하여 토론회 및 지역 사례조사* 연계 추진
 - * 사례조사 및 현장의견 수렴 통해 연구의 현장성 강화
- 「농어촌정책 패러다임 전환 체계 설계」 연구용역 착수(‘26.6.~)
 - 기존 농어촌 정책 추진 체계 및 주요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 지자체 현장면담 통한 사례조사 추진: 순창군 6.26, 하동군 7.14
-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추진(‘26.7.8.(수), 호남권)
 - 농어촌정책 사업 참여 경험에 있는 주민위원 등의 정책 체감도와 개선 과제 청취

□ 향후계획

- 정책연구용역 지자체 현장조사 및 권역별 토론회* 추진
 - * 강원·충청권 토론회 개최 : (일자) 26.8.5.(수) , (장소) aT센터
 - * 영남권 토론회 개최 : (일자) 26.8.12.(수) , (장소) 청도군 예정
- 제2차 패러다임 전환 TF 회의 및 정책연구용역 추진 보고(8월 중)
- 농어촌분과위원회 안건 심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26.12월)

4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모색

□ 추진배경 및 목적

- 현행헌법은 변화된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농업계를 중심으로 제기
-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헌법개정에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개정 방향 모색*
 - * 현행 헌법에 농어업·농어촌 관련 조항과 현재 농어업·농어촌 경제·사회·환경적 현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실현, 공익적 가치 등 반영

□ 추진현황

- 연구용역 추진과, 자문 위원(TF) 구성하여 관련 조항 개정(안) 도출 중
 - 관련 조항 분석, 헌법에 담아야 할 가치* 설정 및 법리적 근거,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논의 등 회의체 운영
 - * 식량주권, 공익적 가치, 경제 민주화, 농민 권리, 민주주의, 평등 등
 - (여론조사 완료)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정도, 헌법 개정 수요, 논의 쟁점 등을 포함하여 사회적 수용성 확인
 - * 표본수 1,000명, 휴대전화 전화조사, 농어업·농어촌 헌법 개정 인지도·사회적 관련성·보완 필요성·식량권·공익적 기능·경자유전 원칙 등 17개 문항

날짜	주요 논의 내용	비고
'26.04.27	헌법 개정 방향 연구 착수보고, 운영 방향 설정 등	1차(농어촌분과 회의)
'26.05.21	헌법 조문 체계 개정(안) 검토 및 논의 공론화 방향 설정 등	2차(자문회의 1차)
'26.06.30	헌법 조문 체계 개정(안) 검토 및 논의 연구보고서(안) 검토, 여론조사 결과 공유, (공론화) 국회 토론회 계획 논의 등	3차(자문회의 2차)
'27.07.06	농어촌분과위 소관 TF (헌법 조문 개정(안) 등) 운영현황 보고	4차(농어촌분과 회의)

□ 향후계획

- (공론화) 여론조사 결과 활용한 국회 토론회 추진 예정(8월 중)
 - 공론화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토론 및 지속적 소통추진
- 농어촌분과위원회 안건 심의 및 본회의 안건 상정('26.10월)

V. 농수산물식품분과위원회

<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 체감물가 대응 개선 방안	○ 추진현황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영향력 분석을 통해 물가지수 영향력이 서비스·공업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 - 소비자물가지수의 농축수산물 가격 반영체계 개선방안 논의 - 소비자 인식 개선 및 맞춤형 소통체계 구축방안 논의 ○ 향후계획 - 농축수산물 물가대응 TF^(가칭) 구성하여 후속 논의 진행 - 연구용역 결과 실행 가능한 과제를 선별·정리, 대응 방안 마련
2. GMO표시제 안착을 위한 표시기준 개선 제안	○ 추진현황 - GMO표시제 TF 구성 및 운영(2.24.~, 1~3차 회의) - 식약처 행정예고 고시안에 대한 수정 제안 ① 고시개정안 3개 품목군 외 1개 품목(소스류) 추가(제3조 제2항 제4호 신설) ② 식품군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근거 신설(제3조 제3항) ③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 기준 강화(현행 3% → 0.9%로 강화) ○ 향후계획 - 식약처 검토결과 회신에 따른 TF 추가 논의 진행 - Non-GMO 표시기준 변경, 완전표시제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 논의
3.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의 제도화	○ 추진현황 - 먹거리기본권 보장 TF 구성 및 운영('26.4.15.) - 제1차 TF 회의를 통해 먹거리 관련 4개 핵심 추진과제 도출('26.4.29.) - 제2차 회의를 통해 지역먹거리계획 실행력 제고를 위한 지역간담회 추진계획 및 지역먹거리계획 개선과제 연구용역 추진 논의('26.6.10.) ○ 향후계획 - 로컬푸드 활성화 논의(3차 회의, 7.23.), 지역간담회 추진(8~10월) - 식량주권 TF, 지역돌봄 TF 추진 상황 공유 및 연계방안 검토
4. 농산물 유통혁신 방안	○ 추진현황 - 농산물 유통혁신 TF 구성 및 운영('26.4.15.) - 제1차 TF 회의를 통해 유통혁신 4개 핵심 추진과제 도출('26.5.7.) - 제2차, 3차 TF 회의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 및 도매시장 제도개선 방안 논의('26.5.26., 7.7.) ○ 향후계획 - 산지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 방안 논의(4차 회의) 및 현장간담회 개최 -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및 부처의견 수렴
5. 우리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K-FOOD 가공산업 활성화	○ 추진현황 -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국산원료 사용 비중이 약 32%로 낮음 - K-FOOD 수출도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 - K-FOOD 활성화 TF 구성 및 운영('26.7.) ○ 향후계획 - TF를 통한 논의 사항 구체화, 관계 부처 정책 제안 등
6. 해조류 생산해역 안전관리 강화 및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 추진현황 - 수산물안전 TF 구성 및 운영(5.7.~, 1~2차 회의) - 해조류 생산해역 안전관리 및 수산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TF를 통한 논의 사항 구체화, 국회 토론회 개최, 관계 부처 정책 제안 등

1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 체감물가 대응 개선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축수산물은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필수재로 소비자물가지수 내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 변동 시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물가 부담은 크게 나타남
- 농축수산물 물가지수와 소비자 체감물가 간 괴리를 분석하고, 물가지수 반영체계 개선과 소비자 등과 소통방안 개선 필요
-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연구용역('25.12.29~'26.7.31)

□ 추진현황

-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영향력 분석
 - 소비자물가지수 내 농축수산물의 가중치, 기여도, 품목 구성 등 분석, 물가지수 영향력이 서비스·공업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
 - * 가중치 및 기여도 : 농축수산물 75.6/0.19%p, 서비스 552.4/1.23%p, 공업제품 338.3/0.64%p
- 소비자물가지수의 농축수산물 가격 반영체계 개선방안 논의
 - 대표품목, 조사규격 등 현행 조사체계의 개선 필요사항 검토
 - 농축수산물 가격 특성이 물가지수에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과제 도출(국가데이터처, 농식품부, 해수부 등 협의 필요)
-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소통체계 구축방안 논의
 - 언론 보도 대응, 소비자단체 협력 등 상황별 대응체계와 소비자 맞춤형 소통전략 등 거버넌스 강화 필요

□ 향후계획

- 농축수산물 물가대응 TF(가칭) 구성하여 후속 논의 진행
 - * 연구용역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10명 이내로 구성(8월 중 예정)
- 연구용역 결과 실행 가능한 과제를 선별·정리, 대응 방안 마련
 - * 가격 변동, 체감물가, 언론 보도 등 이슈별로 소비자·언론 대상 세부대응방안 구체화

2 GMO표시제 안착을 위한 표시기준 개선 제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GMO 표시 관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6.12.31. 시행 예정)
 - * (현행)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GMO 표시 → (개정안) 현행 +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약처 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품목은 GMO 표시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추진('26.2.27.~4.30.)
 - * (현행)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는 식품만 GMO 표시 → (개정안) 현행 + 제조·가공 후 GMO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 유지류도 GMO 표시

□ 추진현황

- (GMO 표시제 TF 운영) GMO 표시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문가,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26. 2. 24.~)
- (GMO 표시제 수정 제안)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정 제안('26.4.22.)
 - ① 고시개정안 3개 품목군 외 1개 품목(소스류) 추가(제3조 제2항 제4호 신설)
 - ② 식품군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근거 신설(제3조 제3항)
 - ③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 기준 강화(현행 3% → 0.9%로 강화)
- * 0.9%(EU 기준)로 강화 또는 수입 농산물 GMO 검사 통계 자료 분석 등 과학적 근거를 기반한 비의도적 혼입 비율 설정 제안

□ 향후계획

- 고시개정안 수정 제안에 대한 식약처 검토결과 회신('26.7.1, 붙임 참고)에 따라 T/F 추가 논의 진행
- Non-GMO 표시 기준(현행 : 비의도적 혼입율 0%) 변경, GMO 완전 표시제를 정착을 위한 식품위생법 추가 개정 논의 등 추진

참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제2026-114호] 제출 의견 검토결과

□ 수신처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일부개정고시(안)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3조(표시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 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 표시대상 추가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추진 근거 조문 신설 제출(안) 제3조(표시대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 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식품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및 간장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혼합장·기타장류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당류 3.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용유지류 4.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스류 <i>*시행일은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i>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군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표시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해서는 연도별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대상 추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중장기 검토 - 표시 확대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조문 신설보다는, 법률 시행 이후 제도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표시대상 확대 관련 소비자시민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회에서 지속 논의하겠음

일부개정고시(안)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사유) - GMO 완전표시제 조기정착 등을 위하여 소스류를 추가하고, 나머지 21개 품목군에 대한 시행시점 및 시행여부를 명확히 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추진 하기 위한 근거 조항 신설			
제3조(표시대상) ③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u>비의도적으로 3%이하인</u>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하 생략)	○ 비의도적 혼입치 강화 <table border="1"> <tr> <th>제출(안)</th> </tr> <tr> <td> 제3조(표시대상) ③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u>비의도적으로 0.9%이하인</u>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하 생략) </td> </tr> </table> (사유) - EU 수준(0.9%) 으로 하향 조정 또는 수입 농산물 GMO 검사 통계자료 분석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비의도적 혼입비율 설정	제출(안)	제3조(표시대상) ③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u>비의도적으로 0.9%이하인</u>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하 생략)	▶ 불수용 - 비의도적 혼입비율 기준 강화는 원료조달·구분유통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제도 운영 안정성 및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수용하기 곤란함.
제출(안)				
제3조(표시대상) ③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u>비의도적으로 0.9%이하인</u>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이하 생략)				

3 국민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의 제도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 및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 식량주권 강화와 자급 기반 확대 필요

* 식량자급률 : '90) 70.3% ⇒ '00) 55.6 ⇒ '10) 54.1 ⇒ '15) 53.5 ⇒ '24) 47.9

- 매년 수급 불안 품목 발생 및 로컬푸드 생산물 급식 공급 제한적, 부처^(농업,복지,환경,교육)간 협력 부족 등 국가 먹거리 전략 계획 수립 필요

□ 추진현황

- (먹거리기본권 보장 TF 구성 및 운영) T/F 단장 포함 총 11명

-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활동가, 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 제1차 TF 회의를 통해 4개 핵심 추진과제 도출('26.4.29.)

- ①지역먹거리계획 실행 진단 지역간담회 추진, ②먹거리 돌봄 범부처 협업사업 개발, ③로컬푸드 활성화 방안, ④먹거리기본법 제정 추진

- 제2차 회의를 통해 지역간담회 등 추진계획 논의('26.6.10.)

- (지역간담회) 지역간담회를 통해 지역먹거리계획의 추진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먹거리계획의 실행력 제고 방안 논의

* (지역) 7개 권역 (기간) '26. 8.~10월 (방식) 정부 정책 방향 및 광역 현황 발제, 분임토론

- (연구용역) 지역먹거리계획 실행진단과 개선과제 연구, 7월 중 계약

□ 향후계획

- 로컬푸드 활성화 논의(3차 회의, 7.23.), 지역간담회 추진(8~10월), 분과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12월)

- 식량주권 TF, 지역돌봄 TF 추진 상황 공유 및 연계방안 검토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유통비용 절감, 가격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현장 체감 성과는 제한적
-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반복되면서 농가 경영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 필요

□ 추진현황

- (농산물 유통혁신 TF 구성 및 운영) T/F 단장 포함 총 11명
 -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 제1차 TF 회의를 통해 4개 핵심 추진과제 도출('26.5.7.)
 - ①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②공영도매시장 및 농협 역할 강화, ③산지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 ④소비자의 접근성 제고
- 제2차, 3차 TF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 논의('26.5.26., 7.7.)
 - (온라인 도매시장 개선)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체계 재설계 및 지역·스마트 APC, 지역도매시장을 활용한 산지 풀필먼트센터 구축 제안
 - * 풀필먼트센터: 입고, 보관 재고관리, 주문처리, 선별 포장, 배송 등 전과정을 수행하는 통합물류시설
 - (도매시장 제도 개선)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인하 및 시장사용료 인상, 시장도매인제 전용 시장 신축 등 도매시장법인 제도 개선과 산지조직화 및 품목별 조직화 등 농협공판장 역할 강화 방안 논의

□ 향후계획

- 산지조직화와 계약거래 확대 방안 논의(4차 회의) 및 현장간담회 개최(신미네유통사업단, 8월 말)
-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체계 개선 방안' 마련 및 부처의견 수렴, 분과 위원회 및 본회의 보고(12월)

5 우리 농수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K-FOOD 가공산업 활성화

□ 추진배경 및 목적

- 2024년 기준 국내 식품제조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축수산물 원료는 1,905만 톤이며, 국산 원료 사용 비중은 약 32%로 나타남
- 지난해 K-FOOD 농수산식품은 2015년 이후 10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돌파(전년대비 4.3% 증가)
- 그러나, 국내 식품제조업체의 국산 원재료 사용률이 낮고, 수출 주력 품목은 라면 등 가공식품 위주로 주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농어업생산(농·어가소득)과 직결되지 못하는 상황임
- 따라서, K-FOOD 농수산식품 수출 증가 등이 농어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원 및 관련 제도 마련 등 필요

□ 추진현황

- (K-FOOD 활성화 TF) T/F 단장 포함 총 10명 구성 및 운영
 - 식품업계, 학계, 정부 부처 및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 * 정부 및 기관 : 농림축산산부,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K-FOOD 활성화 TF」 1차 회의 개최('26. 7.)
- (정책연구용역 추진) K-FOOD 가공식품의 국산화 원료 사용 확대 방안 마련('26.7.~11.)

□ 향후계획

- K-FOOD 활성화 TF 2~4차 회의('26. 8.~) : 논의 사항 구체화, 정책 반영(안) 마련
- 본위원회 안전 상정 및 관계 부처 정책 제안('26.12월~)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기후변화, 해양오염 증가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대됨
- 특히, 최근 수출 해조류(김 등)에서 중금속 등 안전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생산 해역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위생·안전관리 필요
- 수산부산물은 식품·의약품·기능성 소재 등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으나, 처리·수집·활용 기반 부족으로 자원화에 한계
- 수산부산물의 위생적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과 정책지원 확대 필요

□ 추진현황

- (수산물안전 TF) T/F 단장 포함 총 9명 구성 및 운영
 - 생산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정부 등 분야별 전문가
 - * 정부 및 기관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과학원
- 제1차 수산물안전 TF 회의 개최('26.5.22.)
 - 해조류 생산 해역 안전관리 강화 방안, 수산부산물 자원화 촉진 방안 등 논의
- 제2차 수산물안전 TF 회의 개최('26.7.9.)
 - 해조류 생산 해역 안전관리 강화 근거 법령 마련, 수산부산물 범위 확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 논의

□ 향후계획

- 수산물안전 TF 3~4차 회의('26. 8. ~) : 논의 사항 구체화, 정책 반영(안) 마련, 분과위원회 보고 등
- 국회토론회 개최 등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관계부처 정책 제안

특별위원회별 주요과제 추진현황[요약]

과제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①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1.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방향	○ (추진현황) 연구용역 착수 및 워킹그룹 통한 논의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 착수('26.6.~) ○ (향후계획)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
2.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 (추진현황) 연구용역 착수 및 기본소득특위 전체회의 통한 논의 -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26.6.~) ○ (향후계획)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전체회의 시 중간보고 등 추진,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 (추진현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대상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및 사용자 제한, 결제방식 개선 등 현장 의견 수렴 - 충남 청양, 강원 정선, 경남 남해, 경북 영양 4개 군 주민 의견 수렴(~4.2) ○ (향후계획) 미개최 지역 대상 하반기 간담회 추진* * 7.15.(수) 충북 옥천군, 7.20.(월) 전남 곡성군 개최 完 7.23.(목) 경기 연천군, 7.28.(화) 전북 순창군, 7.29.(수) 전북 장수군 개최 예정
②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1. 햇빛소득마을 추진 위한 부처 정책 제언	○ 추진현황 - 금융지원 방안 개선 : 대출기관 확대 및 상환방법 추가, 자부담 완화 등 - 기반 지원 강화 : 전력계통 인프라 지원, 부지확보 및 활용효율화 등 ○ 향후계획 - 유형별 햇빛소득마을 표준 모델안 마련 및 햇빛소득마을 고도화 정책용역 실시
2.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구현으로 농어촌 에너지 전환 추진	○ 추진현황 - 부처별 행정병목현상 해소 추진, 바이오매스 관련 활성화 방안 마련 건의 -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체화 방안 마련 준비 ○ 향후계획 -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구현 및 바이오매스 관련 논의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8.25.)
③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1.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 (추진현황) 제1차 워킹그룹 회의('25.10.21.)에서 여성특위 핵심 의제(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권역별 포럼) 확정 - 정책연구용역 세부추진계획 확정(제5차 여특위 전체회의/'26.5.13.) ○ (향후계획) 현장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포함한 정책연구용역 수행(~'26.12.) - 성평등 정책 및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의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2.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운영	○ (추진현황) 제1권역(전남,전북,제주) 포럼 개최('26.4.28./전남광주)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한계 진단 및 정부·지자체, 전문가 협력 필요성 공감대 형성 - 특히, 청년여성농어업인 정책참여 확대, 공동경영주 권리보장, 지역정책협의체 구축 방향 논의 ○ (향후계획) 제2권역(7.31.), 제3권역(9월 중), 전국단위 포럼(10월 중) 순차적 개최 - 권역별 정책수요와 지역 현안 발굴,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 협력체계 지속 강화

VI.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1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

□ 추진배경 및 목적

-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 범위, 지급 단위, 적용 지역, 재원조달 방식 등 핵심 제도 요소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정책 효과에 차이 발생
 - 이에 대상별, 재정분담별 시나리오 제시를 통해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완료 후 본 사업에 대한 로드맵 및 정책 설계 근거 마련을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방향성 제시

□ 추진현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방향」 연구용역 착수('26.6.~)
 - 지급 대상 및 적용 범위, 재원 분담 구조 및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 분석
 - 시나리오별 재정 소요, 정책효과 및 적용 가능성 등 검토
-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연구용역 **관리** 및 추진 방향 논의
 - 재정 규모와 재정 분담 방안 등 객관적인 수치와 시뮬레이션 통해 제시
 - 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한 재정 적용 방안 검토

□ 향후계획

- 워킹그룹 의견 반영하여 정책연구용역 추진
-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12월)

2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어촌 기본소득을 사회연대경제와 연대해 지역 내 서비스 공급과 소득 재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책모델 마련
 - 기본소득으로 지역 내 선순환 유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 내 부족한 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조직 육성 등

□ 추진현황

-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26.6.~)
 -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통한 지역 활성화 모델 발굴
 - 지역 내 소비·서비스·돌봄·일자리·소득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 연계체계 및 추진과제 제시
-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전체회의 통해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주요 검토과제 논의
 - 농어촌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 도출에 중점 추진
 - 지역 여건과 역량 차이를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정책 연계 방향 검토

□ 향후계획

- 농어촌기본소득특위 전체회의 시 중간보고 등 추진(‘26.8.)
- 토론회 및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실효성 및 타당성 검토

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순회 간담회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 인식 및 현장 의견을 파악하기 위한 주민 참여 간담회 운영
- 주민 관점에서 인식되는 제도 효과와 운영상 쟁점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논의에 참고할 수 있는 현장 의견 수렴

□ 추진현황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대상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 충남 청양, 강원 정선, 경남 남해, 경북 영양 4개 군 주민 의견 수렴(~4.2)
 - 시범사업 추진 이후 생활 변화, 지역 내 소비 및 공동체 활동 등에 대한 주민 인식 청취
 - 사용처 제한, 결제방식 개선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 수렴
- * 잔액 확인 어려움, 지역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운영 방식에 따른 이용 불편, 의료기기(보청기 등) 판매점 포함한 사용처 확대 요구 등
-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통한 정책 논의 추진
 - 간담회 결과 및 지역별 주요 쟁점 공유
 -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현안 및 향후 논의과제 발굴

□ 향후계획

- 미개최 지역 대상 하반기 간담회 추진* 및 현장 의견 수렴 지속
 - 지역별 현안 파악을 통해 특위 논의 안건 및 토론회 등 주제로 선정
 -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효과 및 지역사회 변화 등 사회적 가치 논의

순번	지역	일정	순번	지역	일정
1	충남 청양군	3.20.(금)	6	전남 곡성군	7.20.(월)
2	강원 정선군	3.25.(수)	7	경기 연천군	7.23.(목)
3	경남 남해군	4.1.(수)	8	전북 순창군	7.28.(화)
4	경북 영양군	4.2.(목)	9	전북 장수군	7.29.(수)
5	충북 옥천군	7.15(수)	10	전남 신안군	일정 조율 중

- 지역별 공통 및 차별적 쟁점 파악을 통해 특위 논의 안건 및 토론회 등 주제로 선정, 국회·관계부처 등에 정책 제안

VII.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1 햇빛소득마을 추진 위한 부처 정책 제언

□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 추진으로 농어촌 재생에너지 자립마을 구현과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 도모

□ 추진현황

- 햇빛소득마을 추진 위한 금융 관련 지원 방안 개선 요구
 - (기후부) 대출 기관 확대 및 대출 상환 방법(既 5년 거치 15년 상환) 추가 요청
 - * 새마을금고, 신협으로 취급 기관 확대, 1년 거치 19년 상환 신설
 - (추진단) 총 사업비의 자부담(15%) 부담 요건 완화 방안 요구
 - * 정부·지자체 보조금을 자부담 인정 / 공동 부지를 '현물출자' 및 상호금융 출자 인정
- 전력 계통 부족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강화 방안 모색
 - (기후부) 마을 단위 ESS 설치 후 국가 차원의 관리 전담 체계 요청
 - * 자부담 없는 배전망 ESS 운영으로 지원 변경, 마을공동체 우선접속권 상임위 통과
- 부지 확보 및 활용 효율화 위한 적극적 행정 대응안 마련 요청
 - (농식품부) 사업 부지 확보 위해 관련 공공부지 관리기관 협조 강화
 - * 저수지, 비축농지 등 7,854개 매칭 가능 부지 발굴 및 농어촌공사 정보공개 중
 - * 영농형태양광법 본회의 통과, 12월 시행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준비 중

□ 향후계획

- 농어촌 현장에 적합한 유형별 햇빛소득마을 표준 모델안 마련
 - 햇빛소득마을 공모 현황 분석 통한 개선점 확인 및 유형 분류
- 햇빛소득마을 확산 전략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 실시
 - 햇빛소득마을 발전모델 고도화 및 확산에 따른 정책 대응안 마련

2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구현으로 농어촌에너지 전환 추진

□ 추진배경 및 목적

- 태양광 공급 확대와 함께 바이오에너지 활성화로 농어촌 환경문제 해결과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사회 환원

□ 추진현황

- (요청 : 농식품부, 기후부) 부처별 행정 병목 현상 해소 방안
 - 부처별 상이한 규제와 인허가 지원 해결 위한 범부처 협의체 구성 요청
 - * 가축분뇨법과 폐기물관리법 중복 문제 해결 및 행정 절차 간소화 → 중장기 로드맵 마련 위한 협의 중
- (요청 : 농식품부, 기후부) 바이오매스 관련 열에너지 인센티브 신설
 - 발전 폐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생열 인센티브 마련 반영 요구
 - * 열에너지 관련 안정성 기준 先 정립 및 열에너지 계량 표준화 작업 선행 후 조치
-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위한 유인 방안 마련 모색 및 대안 요청
 - (요청 : 기후부) 제조원가와 판매가 사이의 약 5만원 손실 보전 REC 필요
 - *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REC 규칙 유연화 및 명시하는 방안 검토 중
 - (요청 : 농식품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수요처 확대 및 소규모 시설 확대
 - * 대규모 발전소에서 축산 농가, 시설하우스 등 소규모 보일러 시설 확대
-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모델 구체화 방안 마련 준비
 - 주민과 농가가 재생에너지 전환의 주체가 되는 마을 주도형 모델 마련
 - * 경축순환 농업과 연계한 마을 단위 에너지 자립모델 구현,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8월 중)

□ 향후계획

- 바이오에너지 자립마을 구현과 바이오매스 관련 주요 의제 논의를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8월 중)
- 바이오에너지 정책 안전 본회의 상정

VIII.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1 농산어촌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모색

□ 추진배경 및 목적

- 여성농어업인의 노동·돌봄 환경과 성평등 정책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돌봄서비스, 노동환경 개선 등 실행 가능 정책과제 도출
 - * (경제활동) 농사는 평균 50.2% 담당, 설문응답중 50%이상이 담당하는 경영일 없다는 비율 39.6%
 - * (노동시간) 남성 농업인보다 하루평균 노동시간 ↑(농번기 48분, 농한기 78분)

□ 추진현황

-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범부처적, 구조전환 필요성 공감대 형성(제1차 워킹그룹 회의/'25.10.21.)
 - 여성특위 주요 의제 확정 ①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②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③ 성평등 권역별 포럼 개최 * 중장기적 내용 중점 의제 설정
- 정책연구용역(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세부추진 계획 확정(제5차 여특위 전체회의/'26.5.13.)
 - 성평등 가치와 공동체 기반의 인식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 정책과제 실행방안 등

구 분	주 요 내 용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26. 7. ~ 12.)	■ 농산어촌 성평등 실태 및 여성의 정책참여 현황 조사 ■ 농산어촌 성평등 교육체계 및 정책수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26. 7. ~ 12.)	■ 여성농어업인 일-가정 양립 여건 및 정책환경 분석 ■ 농산어촌 성평등 정책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및 통합돌봄 TF연계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실행방안 마련

□ 향후계획

-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정책연구용역 추진(중간·최종보고 포함/~12월)
- 성평등 정책과 일가정 양립 실행 방안 정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2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운영

□ 추진배경 및 목적

-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과 일-가정양립 등의 실행방안, 중앙-지방 간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 추진으로 성평등 인식 제고 방안 마련

* (양성평등) 지역사회 내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다는 인식 비율 63.6%

* (직업적지위) 경영주 23%, 공동경영주 27.6%, 공동경영주외 농업인 49.1%

□ 추진현황

- 성평등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필요성 인식 및 개최 확정
(제1차 워킹그룹 회의/'25.10.21., 제5차 전체회의/'26.5.21.)
-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1권역 포럼 개최(4.28./김대중컨벤션센터)
 - 여성농어업인의 정책 현황 및 한계를 진단, 정부·지자체·전문가·현장 활동가 간 협력 기반 마련 필요성 공감대 형성
 - 청년여성농어업인 육성을 포함해 정책 참여 확대와 현장 중심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
 - 공동경영주 제도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지자체 정책 협의체 구축 및 상시적 참여체계 마련 등

《 참고 :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 관련 포럼 운영계획 》

- (추진방법) 전국 권역별* 총 4회 추진(권역 3, 전국 1)
 - * (1권역/전남,전북,제주) 광주 / (2권역/경북,경남) 경북 / (3권역/충남·북,경기,강원) 충남
- (추진시기) 4월 중 첫 포럼 시작으로 권역별 추진*
 - * (4월) 1권역 기 추진(전남광주) → (7월) 2권역(경북) → (9월) 3권역(충남) → (10월) 전국단위(국회)
- (참석인원) : 약 400여명 / 권역 및 전국단위 행사별 각 100명

□ 향후계획

- 제2권역(7.31), 3권역, 전국단위 포럼을 통해 지역별 현안과 정책수요 발굴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거버넌스 구축 및 민관 협력체계 강화 지속 추진

농수산물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2026. 7.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수산물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요약]

□ 추진배경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상당한 자원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폐기되거나 저부가가치(사료·비료 등)로 활용되고 있음
 - * 농산부산물 발생량 약 134만톤('24년 추산), 수산부산물 발생량 약 203만톤('23년 추산) : 참고1
- 부산물 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등으로 고부가가치 이용에 어려움이 따르며, 부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 도출 필요
 - 바이오매스 기반 신산업(바이오플라스틱 등)의 핵심 원료로 활용 가능하며, 순환경제 및 신성장동력 창출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 필요성 증대

□ 현황 및 문제점

- (제도 측면) 현행 법체계가 부산물을 ‘폐기물’ 중심으로 관리하여 활용 범위 제한 및 인허가 부담 발생(폐기물관리법 중심 구조)
- (기술·산업 측면) R&D 및 제품 개발은 확대되고 있으나, 원료 수급 불안정, 기술 표준화 미흡, 안전성 신뢰 부족으로 산업 확산에 한계 존재
- (시장 측면) 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및 수용성이 낮아 기술 성과가 시장 확대와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임
- (구조적 문제) 부산물의 발생-수집-처리-활용-제품화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경제성 문제) 재활용 결과물이 무상 공급되는 등 시장 가치가 낮아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형성에 한계

□ 개선 방안

- (법·제도 개선) 폐기물 중심 관리 체계에서 탈피하여 ‘순환자원’ 개념 확대 및 활용 유형(식품·사료·바이오소재 등) 특성에 맞는 제도 적용과 규제 해소
- (산업·기술 기반 강화) 원료 수급-소재화-제품화 전주기 R&D 및 표준화 지원, 기술 실증 확대를 통한 상용화 촉진, 산학연 협력 및 클러스터 기반 생태계 구축
- (시장 활성화) 인증제도 및 정보 제공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공공구매 등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업사이클링 제품 인식 개선 및 가치 홍보 등
- (거버넌스 구축) 농식품부·해수부·기후부·식약처 등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 정책 추진, 순환 경제 및 바이오경제와 연계한 국가 전략 과제화



농수산물식품 부산물 이용 활성화 방안 세부 목차



I. 배경 및 필요성	59
II. 현황 및 문제점	61
III. 개선방안	63
참고 1. 국내 부산물 발생 및 연구개발 동향	67
참고 2. 해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사례	68
참고 3.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샌드 박스	69

I.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전세계 식품의 1/3이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폐기

- 이는 기후변화, 식량안보 문제의 원인이며, 식품 폐기물(부산물)의 순환 이용을 문제 해결책으로 삼아 많은 국가가 “순환 경제” 정책 적극 도입

순환 경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 발생, 오염 등의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해결 체계로서 낭비와 오염을 제거하고, 가치가 높은 상태로 제품과 재료를 순환시키며, 자연을 재생하는 것이 핵심임(엘렌 맥아더 재단)

- 해외의 순환 경제 실천은 식품 부산물의 사료·비료·에너지화 등 전통적 재활용 범위를 넘어,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소재로 업사이클링하여 고부가가치 활용 중

업사이클링(upcycling)은 버려지던 자원(폐기물·부산물)의 단순한 재활용 차원을 넘어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고,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순환 경제의 중요 실천 방법임. 우리말로 “새 활용”이라고도 표현함

□ (신성장 산업화) 해외는 클러스터와 바이오 정제 형태로 신성장 산업화 추진

- 해외는 산학연 연계와 지리적 우위에 기초한 클러스터를 도입하여 부산물 이용과 산업화를 추진 중
 - 대표적 사례인 아이슬란드 해양 클러스터(IOC)는 연구·가공·생산·기업 클러스터를 항구에 조직하고 수산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제품화에 성공
- 해외는 부산물 순환 이용을 위한 바이오 정제 개념을 도입하여 바이오소재 개발부터 연료생산까지 산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바이오 정제(Bio-Refinery)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다단계 활용하여 바이오 기반 제품과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임(참고 2).

<부산물의 바이오소재 활용>

- ▲ 그린바이오 : 기능성 사료첨가제, 업사이클 식품 등 (각종 농수산 부산물)
- ▲ 레드바이오 : 의약품, 의료 진단 도구 등 (연어 PDRN, 대마 등)
- ▲ 화이트바이오 : 바이오연료, 바이오플라스틱 등(해조류, 패류, 농산부산물)
- ▲ 블루바이오 : 해양수산물 유래 바이오 신소재 등

□ (규제) 국내법은 농수산물식품 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 자원화 이용 규제

- 「폐기물관리법」은 다양한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농수산물식품 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 부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재활용·업사이클링 이용 가능 유형과 범위를 엄격히 제한
- 기후부 유권해석과 규제 특례로 업사이클 식품 및 제품화 사례 있으나, 많은 업체가 폐기물 규제로 인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어려움 호소

□ (개념) “농수산물식품 Total Utilization” 과 다단계 순환이용의 개념 제시

- 농수산물식품 Total Utilization : 미이용 폐기 부산물을 자원으로 적극 이용, 이미 이용 중인 부산물은 더 높은 가치가 발생하도록 활용하는 것
- 이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부산물을 다단계로 활용하여 순차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용도에 사용하고 최대의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강조

다단계 활용(cascading use)의 예 :

벼 → 쌀 → 식품(밥·햇반) → 쌀겨(식품첨가물·화장품 원료) → 짚(사료·갈짚) → 갈짚(버섯 재배 배지) → 배지(바이오가스) → 바이오가스 소화액(액비)

□ (필요성) 부산물의 다단계 순환 이용은 사회에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나, 국내 제도적 기반 부족과 규제, 산업·기술의 낮은 성숙도, 업사이클링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으로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황

- 농수산물식품 부산물의 순환 이용은 환경문제 경감(폐기물 저감), 신성장동력 육성(바이오경제), 농수산업 전략 산업화 및 생산자 소득 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 효과를 제공하므로, 산업화 생태계 조성 방안 검토 필요
- 농수산물식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의 다단계 고부가가치 자원화 활용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편익을 제공

- 경제적 편익 : 농수산업 소득 및 생산액 증가, 폐기 처리비용 절감,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사회적 편익 : 원재료 해외 수입 감소로 자급률 상승과 식량안보 제고, 소비자의 가치소비 실현 등
- 환경적 편익 : 폐기물 발생량 감소,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예방, 폐기물 소각 부작용 감소 등

Ⅱ. 현황 및 문제점

1 부산물 자원화 현황

- (식품) 국내 부산물 이용 식품화는 아직 초기 단계
 - (주)리하베스트가 국내 최초로 맥주박 업사이클링한 식품 원료 출시한 이후, CJ, 풀무원, 롯데 등 대기업이 식품 부산물을 업사이클링한 제품 출시
 - 기후부 유권해석, 식약처 협조, 국세청 규제 해소 후 가농(리하베스트)
 - 업사이클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부족, 낮은 기술력과 품질, 높은 생산 단가, 여전한 규제 작동 등의 문제로 시장 확대에 어려움 지속
 - 대기업은 식품 제조공정 폐기물 절감과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시도
- (바이오제품) 연구개발 진행 단계로 규제 해소와 사업화 지원 필요
 - 원료 수급, 적정 기술개발, 시장확보, 규제 등의 문제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분야별 국책연구사업 진행 중
 - 농산부산물은 그린·화이트바이오, 수산부산물은 레드·화이트바이오 제품 중심으로 업사이클링 기술개발 추진 중
 - PDRN 추출 제품화, 바이오플라스틱 제품화, 기능성 물질 추출 및 제품화

2 규제와 제도 문제

- 부산물 이용 애로사항 및 규제 관련 문제는 「폐기물관리법」 관련이 대다수
 - (폐기물관리법 규제 과도) 타인의 부산물을 이용하여 업사이클링·재활용할 때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 신고(허가) 및 폐기물 발생·처리 보고 의무 있음.
 - 부산물을 폐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부산물의 자원화 이용이 아닌 폐기물처리 처리 행위에 해당하는 신고·허가 절차가 필수적
 - (부산물 재활용 가능 유형 제약) 폐기물 재활용을 예외적 처리 행위로 규정, 재활용이 가능한 유형을 제한적으로만(단순 공산품·비료·연료) 인정
 - (수산부산물법의 부산물 범위) 현행 「수산부산물법」이 규정하는 부산물은 6종의 패류 껍데기로만 제한되어 나머지 부산물을 폐기물로 취급

- (폐기물과 부산물 경계 모호) 폐기해야 하는 폐기물과 재활용 가능 부산물의 명확한 법적 정의와 기준 제시 필요
 - 규제 관련 현장 의견 대부분은 부산물과 폐기물의 경계가 모호함을 지적, 농수산물 부산물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 법은 오직 「수산물법」
- (부산물 관련 모호한 법령과 정보) 부산물 활용 관련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적절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나 공식적 지침 부재하고 정보도 부족
 - 부산물 업사이클링 관련한 민원, 가이드라인, 판례·유권해석, 유용 기술, 연구 동향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스타트업 등의 진입 제한적
- (순환경제사회법과 부조화) 부산물 자원화에 있어 순환경제의 실천을 위한 「순환경제사회법」과 「폐기물관리법」의 조화로운 적용 필요
 - 국정과제 42번(순환경제 활성화), 36번(신산업 규제 재설계) 실천 협업 필요

2 활성화 제약 요인

- (통계·정보 부족) 부산물 관련 통계 및 맞춤형 정보 부재로 정부의 정책 수립과 참여자의 효과적 의사결정에 제약 발생
 - 통계 부재로 가치사슬 단계별 부산물 관련 정보 및 실태 파악 어려우며, 부산물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자-수요자 연계 맞춤형 정보시스템 필요
- (전반적 기술 역량 부족) 부산물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한 기술 역량이 낮은 상황으로, 부산물 소재화 및 적정 처리·가공기술 개발 보급 필요
 - 부산물 소재화와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공정 표준화 초기 시작 단계로, 기술 역량 강화 및 성과확산 체계 구축 필요
 - 단기 성과보다 품질, 위생 안전, 자동화, 저에너지 투입 기술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의 중장기 기초 기술 연구 병행 필요
- (사업성과 시장확보) 부산물 이용 업체의 낮은 수익성(높은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낮은 인식 수준 등에 의한 시장 확대 어려움 발생
 - 부산물 고유의 계절성, 지역성, 규제 때문에 높은 생산비용 발생
 - 클러스터, 다단계 순환이용(바이오 정제) 플랫폼 구축으로 비용 효율과 경제성 확보 필요하나 아직 관련 정책 관심이나 지원 부족
 - 부산물 유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낮은 인지도와 부정적 태도

Ⅲ. 개선방안

1 제도 및 규제 개선(안)

- (관할 법령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중심으로 부산물 이용 법령 전환
 - 현행 관할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의 예외적 재활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른 유용 자원의 적극적 순환이용 개념으로 전환 필요
 - 「순환경제사회법」에 따라 부정적 인식을 주는 폐기물(부산물) 용어 대신 순환자원 또는 순환원료 등의 용어 사용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 가능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함(「순환경제사회법」 제2조)

- (순환자원 인정 완화) 순환자원 인정제도 관련 규제 완화(참고 3)
 - 순환자원 인정의 전제조건인 폐기물의 유상거래 필수 조건 및 타사업장의 부산물 수집·이용에 대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요구 규제 완화 필요
 - 순환자원 인정을 위해 의무적 유상거래 문제점 해결 및 폐기물처리 허가 관련 규제 완화로 부산물 이용 활성화 가능
 - 지자체가 폐기물 관련 민원을 우려하여 부산물 업사이클링 업체에 대한 인허가 등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문제도 해결
-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 제한 규제 완화
 - 폐기물 재활용 가능 유형에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포함하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 필요
 - 규제 전면 완화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특정 제품의 원료로 합법적 이용* 가능한 부산물을 해당 제품 생산을 위한 순환자원으로 인정하고 이 경우에 재활용 가능 유형 제한을 해제하고 폐기물 성격을 종료
 - * 식품위생법·약사법·화장품법 등의 기준을 충족하고, 식품·약품·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재활용 가능 유형의 전면/단계적 완화로 담당 부처 유권해석이나 규제 특례 없이 합법적으로 업체 진입 및 제품화 가능

-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규제특례 제도인 규제샌드박스 확장 및 활성화로 부산물의 안전성 여부 검증 및 순환자원 인정제도 연계 지원(참고 3)
 - 규제샌드박스 확장 및 순환자원 인정 연계하여 제품 법령에 원료물질로 미등록된 부산물의 안전성 신속 검증, 원료물질 등재, 순환자원 인정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신규 원스톱-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필요
 - 기존 규제샌드박스(기후부), 순환자원 인정(기후부),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제도는 개별 신청기업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덩어리 규제 해소 어려웠으나, 원스톱-패스트트랙 도입으로 해당 부산물 이용 규제 일괄적 해소 가능
- **(품목별 부산물법 강화)** 부산물 범위 명확화 및 고부가가치 이용 확대, 관련 부처의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 제공
 - 현행「수산부산물법」의 부산물 범위를 유기성 부산물 포함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가칭)농산부산물법」 제정으로 농산부산물의 정의와 재활용 가능 범위 규정 및 고부가가치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해소 필요
 - 농수산물식품 부산물 고부가가치 이용을 위한 담당 부처의 계획 수립과 정책 지원,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 강화 적극 도모
- **(민관협의체 강화)** 관련 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통합적 협의체 필요
 - 순환자원 인정제도 및 재활용 유형 확장 등의 규제 해소 방안을 상시 논의할 수 있는 실무 협의체 운영 필요
 - 기후부·관계 부처, 학계, 기업으로 구성된 규제 해소 추진 협의체 필요

2 분야별 활성화 방안

- 부산물 적극 이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치사슬 단계별 기반 구축 강화
 - **(통계·정보)** 농수산물식품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발생량과 가치사슬 단계별 부산물 발생 정보를 종합하는 시스템 구축
 - 통계 정보와 함께 부산물의 원료 특성(영양·물리적 특성), 소재화 가능성, 수량과 가격 정보 등의 DB화 및 수급 매칭 정보시스템 도입

- **(원료 확보·수거)** 다량 발생 부산물의 현장 수거 및 전처리 연계 시스템, 품목 주산지 중심 다량 원료 확보 체계 구축
 - 주산지 중심의 바이오산업화 클러스터 또는 바이오 리파이너리 도입 추진
 - 부산물 확보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 악취 및 오염 발생 대비 적정기술 개발 및 안전성 확보
- **(수요 촉진)** 부산물 업사이클링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해 영세 규모 업체를 위한 실효적·시장 지향적 정부 지원책 제공
 - 업사이클 제품 인증제도, 녹색제품 인증 등으로 소비자 안심과 홍보 효과, 사회적 가치 소비 기회 제공
 - 제품 공공조달 포함 추진, 기업 대상 보조금·조세 감면, 지자체 급식 조례 연계 등의 경제적 유인 검토(「탄소중립기본법」·「녹색구매법」 연계)

□ 단기 성과 창출 중심이 아닌 지속적 실효성 있는 부산물 이용 확대 및 고도화 연구·개발 강화

- **(기반적 연구 강화)** 부산물의 유용 성분 발굴과 자원화 확대를 위한 기반적 성격의 연구 지속적 수행, 성과물 정보 공유·확산 노력 확대
- **(자동화 추진)** IOC 사례와 같이 전처리 자동화 로봇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제품의 경제성과 품질, 상품화 향상 추진
 - 부산물 원료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수율 확보, 품질 균일화, 취급 중 환경 및 안전사고 발생 위험 저감 등의 효과 기대
- **(품질 제고)** 부산물 이용시 가공적성과 품질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정 품질과 상품성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로 시장 경쟁력 확보

□ 부산물의 폐기물화 변질 예방하는 적정한 관리·등록·신고 체계 구축 필요

- **(정보관리·공유)** 현장의 부산물 취급·보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개별 공정별 발생 상황과 변동 내용을 적시에 정보시스템·DB에 등록
 - 원료화·제품화 공정의 표준화, 등록·신고 의무자의 적시 보고 체계 구축
- **(안전관리)** 부산물의 안전한 취급·관리 어려움 때문에 기업이 단순한 저부가가치 재활용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대책 수립
 - 영세업체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 지표와 기준 도입 및 현장 교육,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 고부가가치 업사이클링 제품시장 확대를 위해 표준적인 제품 규격 도입과 소비자 안심 체계 구축
 - **(규격 확보)** 필요시 제품 원료 및 제조공정에 대한 별도의 고시 등으로 부산물 원료 제품의 안전성과 적정 규격을 확보하여 모든 니즈에 대응
 - 제품(산업) 담당 부처 또는 소비자의 요구에 즉각적 대응
 - **(소비자 안심)** 소비자 선택을 위해 가격, 품질, 맛, 건강 기여 등 다양한 시장 수요 충족 필요, 소비자 안심체계 구축과 가치소비 보증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추진
 - 미국 UFA의 업사이클 식품 인증 제도 도입 사례 참고

참고 1. 국내 부산물 발생 및 연구개발 동향

1 부산물 발생 현황

- (현황) 농수산물식품 생산~가공~유통 과정에서 상당량의 부산물이 발생하나, 공식적인 국가 통계의 부재로 구체적 발생량 현황 파악 어려움. 농수산물 생산량·소비량에 기초한 개별 연구의 추정치로 부산물 발생량 유추
 - 과일·채소류에서 회수 가능 농산부산물 발생량 약 134만 톤(2024년) 추산, 국내 소비량에 기초한 수산부산물 발생량 약 203만 톤(2023년) 추산
 - * 농산부산물 발생량은 엽근채소류, 과일과채류, 조미채소류 등 70개 품목 대상임(우병준 외(2025)).
 - * 수산부산물 발생량은 수산물 소비량(비식용 해조류 제외 및 수입 수산물 포함)에 비가식 비율을 적용함(이남수 외(2025)).

2 부산물 활용 연구개발 현황

- (현황) 과거 폐기물 관련 연구 방향성은 저부가가치 재활용 중심이었으나, 근래 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소재화 활용 연구 중심으로 전환되어 다수의 국책 연구 사업이 진행 중
 -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수산부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진행 중(2022~27년), 건강기능성 바이오 제품 상용화 추진
 - 연어 부산물로부터 바이오 물질(PDRN 등) 추출 생산 기술 개발 완료
 -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의 업사이클링 및 고부가가치 제품화를 위해 ECO-순환 기술 개발사업 진행 중(2025~29년), 농산부산물 자원화와 소재화 기반을 구축 중
 - 농산부산물 자원화(원료 공급, 통합 정보, 이용성 확대) 기반과 소재화(주요 농산부산물 소재화 기술개발) 기반 구축 동시에 추진 중

참고 2. 해외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사례

□ EU의 Pro-Enrich 프로젝트

- 유럽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식품 부산물에서 고부가 바이오 활성 성분을 추출하는 바이오 정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추진, EU와 바이오 기반 산업 컨소시엄의 민관협력 체제로 가동
- 유럽 11개 국가와 16개 기관이 참여하여 다양한 농산부산물에서 유용 성분 추출 및 식품·화장품·바이오플라스틱 등의 바이오 제품을 개발

□ 아이슬란드 해양 클러스터(IOC; Iceland Ocean Cluster)

- 어류 가공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항구, 가공시설, 부산물 이용 기업 등이 집약되어 운영됨. 민간 주체인 IOC 사무국은 컨설팅, 창업, 마케팅, 규제 해소 등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IOC는 공급-수요와 관련된 인프라가 클러스터에 집중
- 로봇 기반의 첨단 가공시스템으로 내장, 뼈, 껍질 등 모든 어류부산물을 활용하는 100% Fish 프로젝트 진행

□ 해외 사례의 주요 시사점

< 주요 시사점 >

- ▲ 부산물의 단순 재활용이 아닌 고부가 바이오산업화와 순환경제를 연계하여 실천
- ▲ 클러스터를 활용하여 물류 최소화 및 연관설비 집적화·자동화로 효율성 극대화
- ▲ 현장 중심의 산학연-정부 소통으로 부산물 이용 규제를 적시에 해소(IOC 사례)

참고 3.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규제샌드박스

□ 순환자원 인정제도

- 「순환경제사회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중 환경 및 인체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 관리를 위한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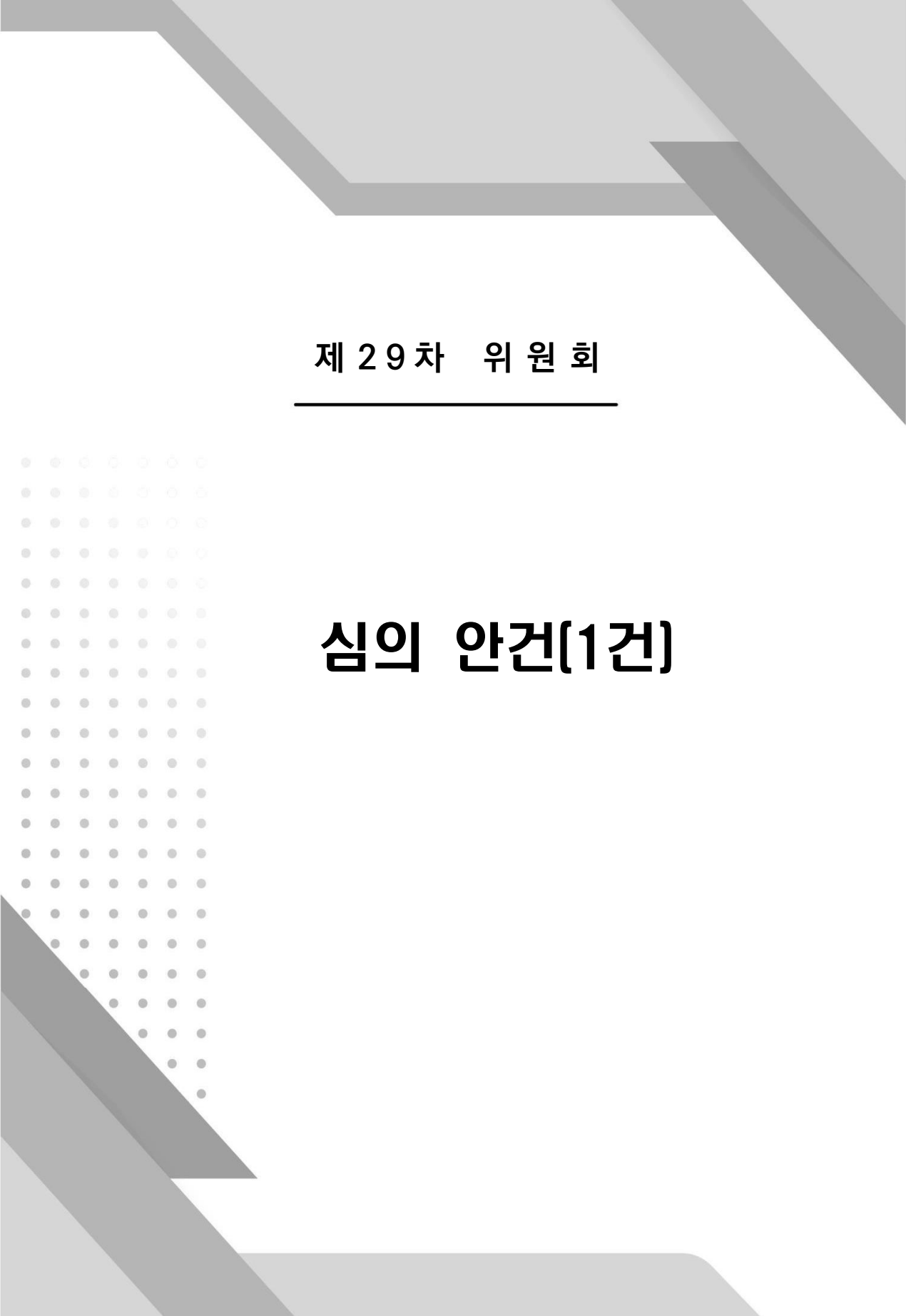
□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특정한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일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면제하고, 규제 특례 또는 임시 허가를 통해 생산을 허가하는 제도

구분	신청자격과 대상
규제 특례	(지원자격) ① 신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③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구역, 기간, 규모 등)하에 시험·검증을 허용(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임시 허가	(지원자격) ①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여건 등이 없는 경우 ②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여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아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농수산물식품 부산물 관련 규제샌드박스 이용 주요 사례

기업명	명칭	규제특례(관련법령)
(주)농업법인 태백사료 등 9개사	농식품부산물의 축산 사료 자원화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사료관리법
(주)비유	감귤부산물을 활용하여 토양 관리 자재와 친환경 소재를 제조하는 기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유형부제)
그린컨티뉴	농부산물(선인장 잎, 감귤박)을 활용한 식물성 가죽 제조 기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유형부제)
어라운드 블루	식물부산물(대두박, 왕겨, 홍삼찌꺼기) 재활용 통해 탄소 배출 저감 신소재 개발/생산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유형부제)
라피코	식물부산물(맥주박, 감귤박, 쌀겨) 업사이클링 통한 화장품 원료 생산 및 이를 활용한 화장품 생산 기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유형부제)
루츠랩	폐기되는 배박, 감귤박을 활용한 고기능성 원료 생산 기술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재활용유형부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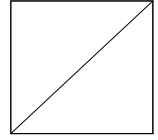


제 29 차 위 원 회



심의 안건(1건)

공개



의안번호	제2026-02호	의결사항
심 의 연 월 일	2026. 7. 22. (제 29 차)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제 출 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호
제출 연월일	2026. 7. 22.

1. 의결주문

□ 「특별위원회 존속기간 연장(안)」에 대한 의결

2. 제안이유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3개 특별위원회* 운영 중

* 농어촌기본소득특위('25.10.~'26.9.), 농어촌재생에너지특위('25.12.~'26.12.), 여성농어업인특위('25.9.~'26.9.)

○ 농특위법 시행령 상 특별위원회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시행령 제6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등) ④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최대 1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현재 운영중인 3개 특별위는 소관 특정 현안에 대한 논의 체계 연속성 확보와 특정 현안 대응을 위해 존속기간 연장 필요

3. 주요내용

□ 특별위 연장 필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촌기본소득·농어촌재생에너지·여성농어업인 특위의 존속 기간을 1년씩 연장

특별위원회	당초 기간	연장 기간	연장 사유(필요성)
농어촌기본소득 특별위원회	'25.10.~'26.9.	'26.10.~'27.9.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연구용역 및 간담회 등 결과를 토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 도출 필요
농어촌 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25.12.~26.12.	'26.12.~'27.12.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분야 제도 개선, 마을 단위 거버넌스 구현 위한 과제 논의 및 운영 전략 모색
여성농어업인 특별위원회	'25.9.~'26.9.	'26.9.~'27.9.	연구용역과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등을 통해 정책과제 구체화 및 의제화하여 부처에 정책개선의견 등 제안

4. 참고사항(관계부처 협의 등)

☐ 운영위원회 검토 : '26. 7. 14.

☐ 당연직 부처 등 의견조회 : '26. 7. 15. ~ 7. 16.

5. 첨 부

☐ 붙임 1 : 농어촌기본소득특별위원회 연장 운영 계획

☐ 붙임 2 : 농어촌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연장 운영 계획

☐ 붙임 3 : 여성농어업인특별위원회 연장 운영 계획

1 운영 개요 및 성과

- (목적)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의 확대 시행에 앞서 현장-정부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국민 공감대 확보에 기여
- (기능)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수용성·실현 가능성 제고 위한 논의 플랫폼
 - 기본소득의 개념·목적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다양한 현장 목소리 수렴을 통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 국내외 시범사례를 점검하여 현황·성과 검토 및 본 사업 전환에 필요한 제도·운영상 개선사항 도출
 - 재원 지원 및 연계 등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 제시
- (위원구성)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 기본소득 관련 단체, 관계부처, 전문가 등으로 구성
 - * 안건 추진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토를 위해 특위 내 5인의 워킹그룹 구성·운영
- (운영기간) '25.10. ~ '26.9. (1년) / (지원부서) 농어촌정책팀
- (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추진 방향 논의, 정책연구용역 착수 및 추진, 시범사업 추진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순회 간담회 개최 등

안건	주요내용 및 논의과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 방향	① 지역순회 간담회를 통해 시범사업 추진지역의 정책 체감효과와 현장의견 수렴 ② 정책연구용역(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적용대상 및 재원 부담 구조 등 본사업 추진 방향 검토 ③ 특위 논의를 통해 연구결과와 현장의견을 종합한 정책방향 검토·제안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 대경제 연계방안	①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모델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검토 ② 전문가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책 연계 방안 논의 ③ 특위 논의를 통해 정책 활용방안 및 정책과제 검토·제안

- (연장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와 현장 의견을 종합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 정책연구용역의 추진 및 논의, 지역 현장·관계기관·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과제 도출과 정책 제안 등 수행
- (운영 계획)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연장운영(1년)
 - 연구용역 수행, 정책연구 용역 및 지역순회 간담회 결과 공유를 위한 토론회 개최로 전문가, 관계기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 제안 사항 마련
 - (주요의제) ①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본사업 추진방향 연구, ②농어촌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 연계방안 마련 추진
 - 정책연구용역(2건) 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 효과 및 시사점 검토
 - 기본사회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기본사회 정책과의 연계방안 논의
 - (위원 재구성) '26년 의제 관련성, 특위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 위주로 재구성·운영(자문위원 포함)
- (향후 계획) 기본소득특위 연장 승인 후 정책연구용역과 지역순회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토론회 및 특별위원회 논의 추진
 -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추진방향과 사회연대경제 연계 방안 구체화를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 마련

1 운영 개요 및 성과

- (목적)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 공감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어촌 에너지 전환 및 국정과제 구현에 기여
- (기능) 농어촌 재생에너지 확산 및 자립을 위해 현장 소통을 통한 정책의 수용성·효과성 제고
 - 재생에너지 확산과 자립의 필요성 및 목적, 사례지역 성과 등에 대한 공론화 및 제도개선, 갈등 해소 방안 등에 대한 현장 목소리 수렴
- (위원구성)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 자자체 사례지역 대표, 유관 단체 및 정책 연구기관의 전문가 및 관련 기관(정부 부처) 관계자 등
- (운영기간) '25.12.11. ~ '26.12.10. (1년) / (지원부서) 농어업정책팀
- (성과) 햇빛소득마을 추진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및 관련 부처에 건의, 햇빛소득마을 추진과 정착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26.4.29), 농어촌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성화 방안 관련 부처 공유 및 건의

안건	주요내용 및 논의과정
햇빛소득마을 추진 위한 제도 개선안 추진	① 햇빛소득마을 사업활성화 위한 금융 조건 개선 ② 햇빛소득마을 자부담 완화 위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 마련 ③ 계통 부족 농촌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
농어촌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성화 방안 논의	① 농식품부-기후부 부처별 행정 병목 현상 해소 방안 요청 ② 바이오매스 관련 열에너지 인센티브 마련 및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위한 적정 REC 가중치 요청 ③ 바이오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 구체화 방안 마련 준비

- (연장 필요성) 농어촌재생에너지 및 햇빛소득마을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거버넌스 차원의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 및 보완 필요
 - 농업인과 지역주민의 공감대 확산 위한 후속 소통 기회 마련 및 현장 요구 규제 개선 요구, 애로사항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구체화
- (운영 계획) 태양광 및 바이오 에너지 분야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1년 연장운영
 - 유관기관, 전문가, 농어촌 주민 등이 참여하는 정기 포럼을 통해 논의주제를 심화 및 의제화하여 부처에 정책개선의견 등 제안
 - (주요의제) 지속가능한 농어촌 구현 위한 에너지 자립 중장기 계획, 햇빛소득마을 고도화 모델 개발 및 전략 논의, 영농형태양광의 확산과 정착, 바이오에너지 분야 규제 개선 대응 방안 등
 - (중장기계획) 지속가능한 농어촌 에너지 자립 마을 구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관리 방안 마련
 - (햇빛소득마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주민 참여형 '햇빛소득마을' 수익 모델의 고도화 및 확산 방안 마련
 - (영농형태양광) 농어촌 마을 조건에 맞는 영농형태양광의 확산과 정착을 위한 현장별 의견 청취 간담회 실시
 -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매스의 활성화를 위한 입지·환경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도출, 바이오에너지 자립 마을 위한 제반 사항 점검 등
 - (위원 재구성) '27년 의제 관련성, 특위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 위주로 재구성·운영

1 운영 개요 및 성과

- (목적) 여성농어업인의 정책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 체계 구축 및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산어촌 발전에 기여
- (기능) 농산어촌 성평등 관련 정책방향 설정 및 제도개선(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정책연계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여성농어업인의 대표성 강화 및 정책참여 확대, 관계부처·지자체·민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농산어촌 성평등 정책 마련 등
- (위원구성) 특별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
 - 여성농어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을 포함하여 구성
 - * 논의 의제 집중을 위해 여성특위 내 6인의 전문가(자문위원) 그룹 기획단 운영
- (운영기간) '25.9. ~ '26.9. (1년) / (지원부서) 농어촌정책팀
- (성과) 연구용역(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을 정책체제로 확장, 연구용역과 권역별 포럼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발굴, 향후 법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연계하기 위한 기반 마련

안건	주요내용 및 논의과정
농산어촌 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모색	① 농산어촌 특성을 반영한 생활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마련 ② 여성농어업인 정책과 생활서비스 정책 간 연계강화, 관계부처·지자체 협업체계 추진방안 제시 ③ 법제도 개선과제, 관계부처 협업체계 및 지자체 연계협력 방안 마련
농산어촌 여성 정책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①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 및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② 성평등 교육 및 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 방안 모색 ③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역기반 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모색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별 포럼 개최	① 수렴된 정책수요를 종합해 여성농어업인 정책과제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② 여성농어업인 정책 거버넌스 구축, 지역 중심의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연장 필요성) 연구용역의 성과를 법·제도 개선과 정책과제 발굴로 연계, 지속가능한 여성농어업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운영 방안 모색 절실
 - 추진중인 연구용역(성평등, 일-가정 양립)의 후속조치와 추진중인 성평등 포럼 등을 감안해 특위 운영기간 연장 필요
- (운영 계획) 농산어촌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속적인 논의를 위해 연장운영(1년)
 - 연구용역과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포럼 등을 통해 정책과제 구체화 및 의제화하여 관련 부처에 정책개선의견 등 제안
 - (주요의제) ①일-가정 양립을 위한 생활돌봄 지원체계 구축방안 ②여성 정책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논의 추진
 - 여성농어업인의 권익향상과 돌봄체계 구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구체화된 과제를 통해 관련 부처와의 협력 등으로 정책 실행력 제고
 - 통합돌봄TF와의 연계를 통해 여성농어업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공통 실행방안 논의 등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발전 전략 제시
 - 성평등 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권역별 포럼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과제 도출, 정책연구용역과 연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정책 반영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
 - (위원 재구성) '26년 의제 관련성, 특위 활동이 적극적인 위원 위주로 재구성·운영(자문위원 포함)
- (향후 계획) 여성특위 연장 승인 후 연구용역과 포럼 연계 등 지속적인 논의를 통한 후속조치 마련으로 현장 중심의 실행가능한 정책과제 도출 및 민관협력 체계 강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국	
담당자	백승인 총괄기획팀장 직무대리
연락처	전 화 : 02-6260-1212 E-mail : plusplus3@korea.kr

